

'95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대회
'9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518-2-5
SAe.a.5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토론회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평화통일의 모색과 대안

How to develop alternativ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일시 : 1995년 7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

When : July 14, 1995, pm. 2:00

Where :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63 B.D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The South Korean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National Liberation
(110-47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01-B호 TEL. 708-4324(代) FAX. 708-4325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토론회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평화통일의 모색과 대안

How to develop alternativ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일시 : 1995년 7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

When : July 14, 1995, pm. 2:00

Where :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of 63 B.D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The South Korean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National Liberration

'95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대회

●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토론회

- <주제> 민족의 평화통일의 모색과 대안
- <일시> 7월 14일(금) 오후 2시- 6시
- <장소>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
- <사회> 강정구('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정책위원장)
- <발제> 마틴 하트 랜즈버그(미국 루이스&클라크 대학 경제학교수) - 독일통일의 교훈
- 유진 케롤(전 미국 해군제독) - 남북한의 군사균형
- 이삼성(한림대 교수) -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 문제
-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 <토론> 헬가 피히트(구 동독 훔볼트대학 한국학 교수)
- 울겐 마이어(독일 녹색당 연방집행위원회 국제담당)
- 나카기다 류타로(일본 관서공동센터 대표)
- 종합약평 : 박순경('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상임대표)

● 환영만찬-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밤

- <일시> 7월 14일(금) 오후 7시~10시
- <장소>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

일시 : 1995년 7월 14일(금) - 15일(토)
 주제 : '민족은 하나다'(KOREA IS ONE)
 주최 :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주관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국제회의

- <주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 <일시> 7월 15일(토) 오전9시 - 1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기자회견

- <내용> 국제회의의 합의문 발표
- <일시> 7월15일(토) 오전11시 -12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만남과 대화

- <일시> 7월 15일(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제>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과제
- <발제> 다닐로 피 비즈마노스 (필리핀 바얀 의장)
- 에우헤니오 치카스 마르티네즈 (엘살바도르 국회 부의장)
- 잭 와그너 (브라질 국회부의장, 노동자당 간부)
- <주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5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eace and Reunification

<Theme> How to develop alternative for peaceful reunification

<Date> 14:00 - 18:00 14th, July

<Plac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63 Building", Youido

<Chairperson> Kang Jung-gu(Chief of policy committee of K.N.C)

<Speakers>

Martin Hart-Lansburg(Professor in economic at the Lewis and Clark Univ, USA)

- Lessons of German Reunification

Eugene J. Carroll(Retired Rear Admiral, USA)

- Military bal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Korea For the Koreans)

Lee Sam-sung (Professor of Hanlim Univ.)

- Searching for the methods of reunification

Choi Kyu-youp(Chief of policy committee of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of Korea) - Task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peace in Korea

Helga Picht (Germany, Professor of Humboldt Univ. : Korean Scholar)

Juergen Maier (Germany, Founding Member of Green Party Germany)

Nakakita Ryutaro (Japan, Lawyer,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Total Appreciation : Park Soon-Kyung(Standing chairperson of K.N.C)

Date : July 14th(Fri) -15th(Sat), 1995

Theme : KOREA IS ONE

Organized by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K.N.C)

Sponsored by The South Korean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 Welcoming Reception - Night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Date : 19:00 - 22:00 14th(Fri), July

Place :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63 Building", Youido

●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Press Conference

Date : 09:00 - 12:00 15th(Sat), July

Theme : For the realiza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Korea

Place : Seijong Hall, Seijong Cultural Center

● Discussion

Date : 16:30 15th(Sat), July

Theme : Task of The third World National Democracy movement(?)

Place : Christian Building

Organized by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of Korea(MADUK)

Speakers

- Danilo P. Vizman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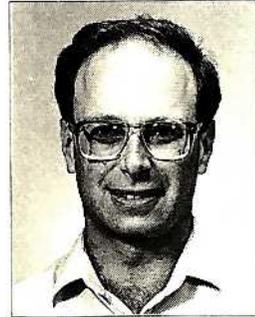
- Eugenio Chicas Martinez

- Jacques Wagner

참가자 소개 (Profile)

1. 마틴 하트-랜즈버그 교수(Martin Hart-Landsberg) (미국)

오레곤주 루이스&클라크대학 경제학 교수. 한국문제전문가.
USA, economic professor of Lewis and Clark Univ.



2. 레녹스 하인스 교수(Lennox S. Hinds) (미국)

뉴저지주 주립대학 법과대학 교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의 미국선임변호사.
USA, Administration of Justice Program-Rutgers Univ.



3. 유진 캐롤 전 제독(Eugene J. Carroll) (미국)

전 미해군제독.
워싱턴 소재 '국방정보센터'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 창립자.
USA, Fomer Rear Admi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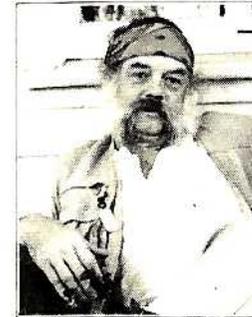


4. 수 베일리(Sue Bailey) (미국)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상임운영위원.
USA, International Action Center, Chairperson of Korean Committee

5. 게리 캠벨 목사(J. Gary Campbell) (미국)

장로교 목사.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로 멕시코 등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제3세계 운동에 참가.
USA, Rev. of Presbyterian Church : Korean War Veteran



6. 브라이언 윌슨(Brian Willson) (미국)

변호사. 법학박사. 베트남전쟁 참전.
미국에 있는 진보적인 제대군인조직의 중심인물.
USA, Lawyer, Antiwar Peace Activ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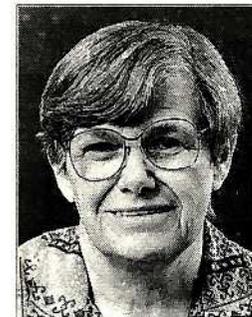
7. 로이 윌프(Roy Wolff) (미국)

미군으로 전쟁 직후 한국에 근무한바 있음. 반전평화운동가.
USA, Peace Offerings-Peace Education Consultant



8. 헬가 피히트(Helga Picht) (독일)

구동독 훔볼트대학 한국학 교수.
Germany, Professor of Humboldt Univ. : Korean Scholar



9. 율겐 마이어(Juergen Maier) (독일)

녹색당 연방집행위원회 국제담당비서.
Germany, Founding Member of Green Party Germany

독일-아시아 Centre



10. 나카기다 류다로우(Nakakita Ryutaro) (일본)
변호사. 대판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전평화운동단체인 관서공동행동센터 대표.
Japan, Lawyer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11. 오후무라 (일본)
일본부전결의 네트워크 대표



12. 줄리엣 치나우드(Juliette Chinaud) (말레이시아)
Malaysia, International Catholic Foundation-Asia Dept.(Brussels, Belgium)
브뤼셀에 있는 카톨릭국제단체의 아시아국 국제서기.

13. 다닐로 비즈마노스(Danilo P. Vizmanos) (필리핀)
BAYAN(신에국전선)의장. 해군장교출신으로
필리핀 민족민주운동의 지도급 인사.
The Philippines President of BAY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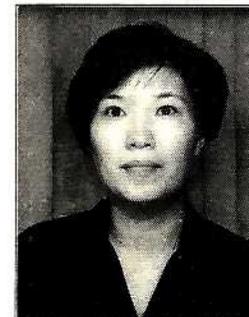
14. 에우헤니오 치카스 마르티네스(Eugenio Chicas Martinez) (엘살바도르)
국회의원, 야당인 FMLN(파라분도 마르티니 민족해방전선)소속 국회부의장.
El Salvador, Deputy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El Salvador

15. 잭 와그너(Jacques Wagner) (브라질)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의 연방의회 국회부의장.
Brazil, Federal Deputy of Brazilian National Congress



16. 이행우(Lee Haeng Woo)
재미동포, '민족공동행사 해외준비위원회' 공동대표.

17. 정기열(Chung Ki Yul)
재미동포, 미연합감리교 정회원 목사,
'민족공동행사 해외준비위원회' 공동사무국장



18. 정유미(Yoomi L. Jeong)
재미동포, '북미주 조국통일동포회의' 국제연대 담당 실행위원

격려문

An Encouraging Letter

셀릭 해리슨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

Selig S. Harris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USA)

나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축하를 드리며 통일실현을 위한 노력을 고무하게 될 성공적인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북한방문과 김일성 주석 사망직전 그와의 대화를 통해 북한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연방제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북한의 통일정책 책임자인 김용순과의 대화에서, 동시에 남한이 연방제로 접근한다면 연방제의 형태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대회가 흡수통일에 대한 반대역량의 힘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핵문제의 진전은 남북한이 전망과 정치적 능력을 갖고 화해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 (남아공화국 성공회 주교)

Desmond M. Tutu (The Anglican Archbishop of Cape Town, Republic of South Africa)

친애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복 50주년을 경축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 온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불의와 압제에 대항했던 남아프리카의 승리는 기도, 경제제재, 희망적인 연대의 메시지 등으로 우리를 지원해 준 전 세계인들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이 나라는, 싸움이 계속되고 분단의 고통이 남아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햇불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와 같은 끔찍한 일이 끝날 수 있다면, 바로잡기 어려워 보이는 모든 상황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이용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적의의 불을 지피는 정치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투쟁의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신께서는 우리를 불화와 분열, 증오와 적의로 갈라지고 이간질하라고 만들어 내지 않으셨습니다. 신께서는 우정과 화합, 웃음과 기쁨, 평화, 번영을 통해 화목하고 통일되며 상호 의존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고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회, 서로 협동하고 걱정이 없는 사회, 민족의 분열이 없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 더욱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회,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으며 분단이 없는 사회.

선은 악보다 강하다.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다.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삶은 죽음보다 강하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께 축복을 보냅니다.

차례 CONTENTS

기조발제 (Presentation)

1. 독일통일의 교훈 - 마틴 하트 란즈버그(미국)	14
Lessons of German Reunification - Martin Hart-Lansburg	
2. 남북한의 군사균형 - 유진 케롤(미국)	50
Military balance of South and North Korea(Korea for The Koreans) - Eugene J. Carroll	
3.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 - 이삼성(한림대 정치외교학과교수)	62
Searching for the methods of reunification - Lee Sam-sung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	82
Task of establishing a system for peace in Korea - Choi Kyu-young	
5. 종합약평 - 박순경(민족공동행사 상임대표)	102
Total Appreciation - Park Soon-Kyung	

연설문 (Speeches)

인권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 레녹스 하인즈(미국)	106
Human Rights Law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South Korea - Lennox S. Hinds	

연대사 (Solidarity Message)

1. 게리 캠벨 목사, 미국 (J. Gary Campbell, USA)	118
2. 브라이언 윌슨, 미국 (Brian Willson, USA)	124
3. 로이 윌프, 미국 (Roy Wolff, USA)	126
4. 줄리엣 치나우드, 말레이시아 (Juliette Chinaud, Malaysia)	129
5. 다닐로 비즈마노스, 필리핀 (Danilo P. Vizmanos, Philippine)	130
6. 에우헤니오 치카스 마르티네스, 엘살바도르 (Eugenio Chicas Martinez, El Salvador)	133

부록 (Appendix)

1.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소개	136
The South Korean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50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2.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소개	138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K.N.C.)	

<거조발제 1 - 요약문>

독일통일의 교훈

마틴 하트 렌즈버그 (미국, 경제학교수)

많은 사람들이 한국분단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4백만의 한국인, 백만의 중국인, 수만의 미국인이 한국 전쟁 중 사망했다.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강제적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가 적대적인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자유를 잃은 고통을 당했다. 더구나 최근의 사태는 두 분단 국가사이의 긴장으로 새롭고 더욱 파괴적인 (핵)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한국인(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들은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최선책의 통일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다. 한국 정부가 독일 통일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별 놀라울 일이 아니다. 독일통일은 동독의 급속한 경제적, 정치적 붕괴에 의해 이루어졌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됨으로 이루어졌다. 남한의 지도자들은 북한에 비해 그들의 체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한국의 통일을 이루는 데 한가지만 제외하곤 독일과 비슷한 흡수통합을 옹호한다. 그들은 갑작스럽고 무계획적이었던 독일통일과 같은 엄청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더 천천히 그리고 구조화된 과정을 바라고 있다.

나는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국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연구에 기여하리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경험이 심각하게 잘못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독은 단지 내부적 문제 때문에 붕괴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일 독일의 제도에 현재 서독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들이 우월하다고 확신하는 서독의 지도자들이, 고의로 동독 체제가 무너지도록 정책을 수행한 것에 기

인한다. 통독과 관련된 엄청난 비용은 동독의 현실이라기 보다는 상당부분 서독의 정치적 제안이었던 것이다. 사실 정치적, 사회적 효과까지 포함하는 독일 통일과정상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크다. 간단히 말하면 서독은 동독의 붕괴와 흡수를 맹렬히 추구하고 그 결과 통일은 독일인 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했다.

내가 앞으로 더 논하고자 하는 것은 남한의 지도자들이 독일 통일과 같은 갑작스런 국면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말과 다르다는 것이다. 서독의 정책에 고무된 남한 지도자들은 실제로 북한의 붕괴와 흡수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남한과 북한의 모든 한국인들의 재앙이 될 것이다. 끝으로 나는 한국인이든 아니든 흡수통일 모델과는 다른 대안적 접근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한국을 창조할 수 있으리라고 결론지었다.

독일 통일로부터 세 가지 요점을 찾자면 첫째, 동독의 붕괴는 상당히 고의적인 서독의 국가정책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동독의 정치적 변화와 통일은 확실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 흡수통합은 동독사람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노동자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희생이 컸다. 셋째, 서독은 통일독일의 체제가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확신했기에 흡수통합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들은 남한정부가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기에 한국의 상황에 간단히 적용될 수 있다.

남한의 통일정책

남한 정부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서독의 모델을 많이 따라 했다. 예를 들면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서독은 동독을, 또는 동독과 관계를 맺는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목표는 동독을 고립시키고 통일 독일에서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서독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유선거에 기초한 통일과정을 동독이 받아들일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남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펴왔다. 남한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을 인정하는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 또한 남한은 북쪽보다 인구가 두 배나 많기 때문에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주장해 왔다.

한반도 내부의 관계

1970년대 초 이전에 남한은 남북한 상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수많은 제안을 거부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직후 북한은 정치회담, 경제와 문화교류, 상호방문, 그리고 평화협정을 포함하는 남북간의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몇몇 제안을 했다. 1960년, 김일성은 두개의 한국을 연방제의 형태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의에 따르면 북한과 남한이 그들의 독자적인 사회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연방에 의해 가능해진 접촉이 많아지면 통일된 한국정부에 대한 넓은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남쪽 정부는 이 제안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반대 제안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한이 북쪽보

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특히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한의 빠른 경제적 성장으로 북한보다 경제와 군사력에서 앞서자 박정희는 1970년대 초 남북한이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또한 남북한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단계들은 인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포함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들을 거부했는데 이 제안들은 통일을 진척시키지도 못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그들은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맺어 남한으로부터 미군의 철수와 연방의 형성, 하나의 유엔 대표부를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에는 남한이 이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신뢰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싫어하고 통일에 별 관심이 없으며 단지 남한을 적화시키려한다는 것이다.

1980년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롭고 세부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1982년 남한의 전두환은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해 민족통일협의회를 만들고 남과 북 사이에 기본조약을 맺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전두환의 제의는 관계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이루려는 박정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남한의 통일을 위한 가장 최근의 제안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였다. 그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본조약을 포함하는 한민족 공동체 헌장의 채택을 이끌 신뢰회복을 주장했다. 결국 동의는 통일헌법제정과 그것을 뒷받침할 한반도 전체에 걸친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과거의 제안들보다는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과거 제안과 같은 통일에 대한 접근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대한 회담 이전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의 접근법과는 정반대다. 예를 들어 한민족 공동체 방안 아래에서 남한과 북한 두 개의 독립국가는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한편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 아래에서 북한과 남한은 분리된 사회-경제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통일된 정치적, 군사적 정책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비록 정교한 형태이긴 하지만 양편의 입장을 살펴보면 기본적 제안들은 이미 다른 쪽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반도 내부의 관계들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서독과 동독은 독일 내부의 관계들을 정상화하는 기본조약에 1972년 동의했다. 이는 주로 서독 정부가 동독의 정통성을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정부는 서로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각자는, 자신을 유일한 대표체, 한국민족의 이익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데, 그리고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내부대화를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비록 어떤 국가도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남한의 북방정책의 성공은 협상력을 상당히 키워 왔다.

북방정책의 성공

독일의 동방정책의 논리에 따라 남한도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단절했던 과거의

정책을 종식시켰다. 1973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남한의 대통령 박정희는 남한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동시에 남한은 이념과 사회제도가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이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북방정책이라고 불린 이 새로운 사회주의 권에 대한 접근은 주로 남한의 안보를 증진시키고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8년 대통령 노태우는 북방정책으로 더 이상 북한의 회생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1988년 7월, 민족이익,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에서 그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동의하며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들도 소련, 중국,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방정책 중 새로운 한가지는 효과적이었다. 1980년대의 중반이후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시장에 근거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더욱더 많은 외국과의 무역과 투자에 신경을 썼다.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남한은 이 발전을 이용할 수 있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주최국으로 많은 접촉을 했으며 이러한 나라들과 수많은 경제협력을 맺을 수 있었다. 곧이어 1989년에는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 1990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소련과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그 대가로 헝가리에는 4억 5천만 달러, 폴란드에는 5억 달러, 소련에는 30억불의 원조를 주었다. 남한의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천천히 진행되었는데 1990년 양국은 상대국의 수도에 무역사무소를 열었고 완전한 외교관계의 성립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남한의 외교적 성공은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변화와 결부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약화시켜서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고 추구되었다. 유엔 가입문제는 이러한 사실의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다.

흡수통일의 추구

노태우의 북한과의 새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하지는 말은 아마도 그의 북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즉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정책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남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다. 남한이 1988년, 북한과 폭넓은 접촉을 하려는 진실된 의도와 기대를 비록 가지지는 않았지만 2년 후에 변화가 있었다. 1990년 국제적인 여건발전, 특히 독일의 통일은 남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반도 내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남한의 국제적인 이익은 북한의 움츠림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북한은 내부의 경제문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직면했다. 1990년 동독이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되었고 소련은 북한과의 특별경제 협정을 폐기했다. 더구나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추진한다고 비난하면서 조사단에게 군사시설을 공개할 것과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남한은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북한이 경제적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외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있는 남한정부는 북한이 남한과의 인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받아들이고 핵 계획을 외부의 조사단에게 공개한다면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한은 남과 북 사이의 빈번한 접촉으로 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체제를 거부하도록 이끌어 결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것을 희망했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은 노태우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이것은 독일의 경험을 재생시키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아주 단일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립도가 크다. 남한과 미국의 아주 큰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교류를 하기 이전에 정치 경제적 문제부터 협상하고 연방을 통해 통일의 기본작업을 담당할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것과 미군의 남한 철수를 주장했다. 노태우의 전략을 경계하면서 그는 1991년 신년사에서 남한이 독일과 같은 방식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환상을 버릴 것을 주장했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흡수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독은 동독을, 단지 선행된 동독의 붕괴 때문에 흡수할 수 있었다. 능력 있는 동독정부였다면 결코 자신의 완전한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과정이었다면 새로운 독일 헌법의 제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서독의 엘리트들은 이것을 원치 않았고 서독정부가 동독의 안정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할 것을 왜 거부했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흡수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서독 정부의 두번째 관심사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비용은 낮은 임금자들과 약한 산업체들로 부터 짜내었고 서독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아닌, 독일 노동자들에 의해 불공평하게 지불되었다.

나는 남한 정부가 이 교훈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흡수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점진주의의 회생에 의해서만 흡수는 수행될 수 있다. 남한의 엘리트들에게 북한 체제의 붕괴와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현재 남한의 정치 경제 관계와 제도의 확장으로 얻는 이익보다 의미가 덜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다음의 조사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정책

앞에서 언급한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남한 정부는 1988년 10월 북한과의 무역금지를 해제했다. 전체 무역량(간접적이고 진행중인)은 1988년 1백만 불에서 1990년 전반기에는 매년 2억불에서 3억불씩 증가했다. 동시에 남한 정부는 대규모의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북한의 경제를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한반도 내부의 경제협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금지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에 불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동안 IAEA가 여섯 번이나 검사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 또한 1993년 3월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지도 않았다. 더구나 The Korea Economic Weekly의 기사에 따르면 NPT로부터 북한의 탈퇴위기 기간 내내 남한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미심장하게도 한반도 내부의 협력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것은 남한 정부였다. 남한 정부는 단지 간접적이거나 진행중인 무역에 대해서만 허락하고 남한의 기업과 북한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실질적인 투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한 제한은 남한 정부의 발표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정치, 군사회담 이전에 경제적 교류를 주장한 것은 남한 정부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붕괴를 피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남한 정부였다.

남한 정부는 한반도 내부의 경제협력을 금하는 것은 북한이 핵의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과 국제감시를 받게 된 것, 과거의 흑연 원자료를 군사적으로 덜 위험한 경수로로 대체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상응하여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은 부분적 금지해제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는 남쪽의 회사가 시설연구와 무역 재개를 시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남한의 회사가 북쪽의 노동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투자는 아직 통제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허락한다면 남쪽의 회사들은 북쪽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한 프로젝트에 5백만 달러가 한계치이다. 이와 비교해보면 대우는 최근 베트남에 3억 달러가 소요되는 공장건설계획을 발표한 적 있다.

남한은 또한 다른 나라가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하려 하였다. 한국에서의 유럽공동체 회의가 북한에 대한 투자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했을 때 남한정부는 북한의 무역관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한 행위는 한가지 결론을 도출케 한다. 즉 남한은 북한의 경제가 안정화되는 것에 대해 진실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남한은 경제적 필요로 결국 북한이 사회 문화적 교류를 받아들일게 해서 북한의 빠른 붕괴와 흡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남한의 노력들

노태우는 그의 6월의 선언에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일본정부는 이 선언에 상응하여 일본과 북한 사이에 미결인 채로 남아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북한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일본사이의 비공식회담이 1990년 9월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담은 관계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두 정부가 곧 만난다는 것과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를 사과하고 북한 정부에 보상한다는 비공식 합의에 도달했다. 공식회담은 1991년 시작되었는데 회담의 성공을 고무하기는커녕 남한 정부는 합의 영역을 제한하려고만 하였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남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북한과 회담을 하는데 5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돈도 북한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과 북한이 IAEA의 핵시설에 대한 조사를 허락할 때까지 압력을 가할 것, 북한과 남한사이의 의미 있는 진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남한이 이미 소련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개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북한사이의 관계정상화를 늦추려는 남한의 시도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과의 대화시에 일본은 남한의 5개 원칙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압력에 일본이 굴복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관한 논쟁을 끝낸 1994년 10월, 협정이 이루어지자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표명했다. 이것은 그의 공적인 말과는 달리 남한정부가 실제로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보상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런 노력들은 단지 북한체제를 손상시키려고 고안된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남한의 노력

일본과 같이 미국도 노태우의 6월 선언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응답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고 한반도로부터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하며 한국전을 끝맺는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요구에 상응하여 미국은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이 대화하는 것과 제한된 학문적, 문화적 교류, 북한에 생필품의 판매 등을 허용했다. 1988년 9월과 1992년 3월 사이의 북한과 미국과의 23회에 걸친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의 생산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는 논의를 가장 많이 했다.

미국은 먼저 북한이 1989년에 핵무기생산을 추구한다고 고발했다. 다음해 미국은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미국의 고발을 부인했고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유지시키는 한 IAEA의 사찰을 거부했다.

두 나라 사이의 의견불일치는 1991년 아주 심각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위반국'으로 규정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의심스런 핵무기 계획을 비난했다. 4월 남한의 국방부는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적 공격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폭격하여 항복을 받은 미국은 김일성과 사담 후세인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한국전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되었을 때 세나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밟았다. 즉 북한과 남한은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은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며, 남한과 북한은 같이 비핵화선언을 할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고 북한은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안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1992년 말, 북한이 두개의 핵폐기물 저장소와 적어도 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비난함으로써 북한과 미국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IAEA는 저장소의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미국의 비난을 부인하면서 북한은 이 요구를 거절했다.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미국이 직접대화를 하겠다고 동의한 후에 그것을 취소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특별사찰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기를 거절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군사적 행동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나 전 미국 대통령 카터가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동의를 얻음으로 제재와 전쟁은 비켜갔다. 7월 김일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8월협정과 앞서 언급한 10월협정으로 북한 핵프로그램의 비군사적 성질을 보증하는 협정을 맺는 성과를 내었다.

주목하건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번째 단계는 아직까지 상징적 가치이다. 더구나 10월협정은 미국과 북한과의 새로운 긴장을 야기할 의견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핵심사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심각한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기회를 가지지 못한 남한 정부는 10월 협정이 가지는 잠재적인 중요성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남한이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전략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우선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이 요구에 동의한다면 남한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를 위한 전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대안적 접근

남한의 흡수통일전략은 두 가지 이유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첫째, 흡수통일은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한국을 창조하는 길이 아니다. 앞선 독일통일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처럼 흡수통일은 현존하는 계급관계와 제도를 강화시킬 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 남한의 엘리트들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흡수통일은 다수가 사회적 변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둘째, 남한의 전략이 성공할 것 같지도 않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노력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전략은 북한에 경제적 고통을 가증시킬 것이다.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남한정부가 교육,노동, 정치, 사회적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수단인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을 사용하게 만들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1994년 동안 법의 남용에 기인하는 남한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덧붙여서 남한의 전략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군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 재발의 위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남한 정부로 하여금 전략을 바꾸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수 있다. 남한 내에서 활동가들은 흡수통일이 얻고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한의 외부, 특히 미국에서 활동가들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끝내고,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공식적으로 한국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북한과 맺어야 하고, 북한과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독립적인 미국의 정책은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고무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하고 남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위한 회담에 접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흡수통일을 위한 남한 전략의 폐기가, 남북한 정부가 상호불신을 끝내고 한국 국민들의 필요와 소망에 부응하는 통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한국의 창조를 위한 의미 있는 진행은 남북한 정부가 통일을 위한 대화에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같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내부의 사회운동은 통일을 가속시키는 그들 자신의 독립적인 기준을 발전시켜야 하고 정부 대 정부의 회담이 이 기준을 고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위한 현재의 일들을 계속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들이 그들의 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관심을 가진 북한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 새로운 지역에 대한 탈취보다는 환경을 존중할 수 있을지를 양 그룹이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도 그런 논의들은 남북한의 환경운동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환경적으로 유지가능한 발전전략이 통일과정의 한 부분으로 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통찰력을 줄 것이다.

비슷하게, 현재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남한의 교사 조합들은 북한의 교육자들과 만나, 특히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적 결합을 존중하는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발전시키고 수행시킬 수 있는 교육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만 한다. 여성들은 현재 한국내부의 여성권리의 의미에 대한 논의와 통일과정에서도 그들의 권리를 심화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내부의 사회그룹들의 빈번한 접촉들은 양 정부가 통일논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확실히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한에서는 국내의 개혁노력과 개인과 집단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계속 적용시킬 것이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집단들이 엄격한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남한의 많은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 국박, 특히 미국은 남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고발함으로써, 북한 사회집단들과 더욱 빈번한 접촉과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한국 내부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결합된 노력이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다. 분단이 50년이 넘었기에 기회를 더 이상 버리면 안된다.

<Presentation 1>

Korean Unification : Learning from the German Experience

Martin Hart-landsberg (Prof. USA)

Many people have suffered because of the division of Korea. Four million Koreans, a million Chinese, and tens of thousands of Americans died during the Korean War. Millions of Koreans remain forcibly separated from family members and millions more continue to suffer a loss of freedom because their country is divided into two hostile parts. Moreover, as recent events have shown, tensions associated with the division of Korea still have the potential to trigger a new and possibly even more destructive(nuclear) Korean War.

For these reasons, almost all Koreans(as well as many non-Koreans) strongly support reunification. There is, however, no such consensus about how best to achieve it. Perhaps not surprisingly, South Korean government thinking about Korean unification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Germany was achieved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the East into the West German system. South Korean leaders, confident of the superiority of their system relative to that of North Korea, advocate a similar absorption process for achieving Korean reunification, with one major exception. They call for a slower and more structured process in order to minimize the enormous financial costs associated with the sudden and largely unplanned

unification of Germany.

While I agree that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deserves careful study by those concerned with Korean reunification, I find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at experience seriously misleading. As I will argue below, East Germany did not collapse simply because of internal problems. Rather, West German leaders, in an attempt to ensure the dominance of existing West German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a unified Germany, deliberately pursued policies designed to speed the breakdown of the East German system. Thus, the enormous financial costs associated with German unification are, to a considerable extent, the result of West German political imperatives rather than East German economic realities. In fact, the "true cost" of the German absorption process, including its political and social effects, is much greater than commonly admitted. In short, West Germany aggressively pursued the collapse and absorption of the East and the resulting unification has not served the interests of the great majority of Germans.

I will further argue that although South Korean leaders claim to want to avoid the raped pace of German unification, their actions betray their words. Motivated by political imperatives similar to those of those of their West German counterparts, South Korean leaders are actively pursuing policies designed to produce the collapse and absorption of the North. This outcome, as was true in Germany, would be a disaster for the Korean people, those in the South as well as the North. Finally, I conclude by highlighting ways that Koreans and non-Koreans can advance an alternative approach to reunification, one which, in contrast to the absorption model of unification, doe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a peaceful, independent, and democratic Korea.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Most explanations of the collaps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and its absorption into the West correctly start with a discussion of state socialism's growing economic problems and loss of popular legitimacy over the decade of the 1980s. Gorbachev's rise to power in the USSR legitimated efforts at reform in a number of Eastern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as well as the Soviet Union. In East Germany, however, the ruling SED (Socialist Unity Party) actively resisted even the notion that reform was necessary. Frustrated by their government's hard-line position, growing numbers of East Germans decided to leave the GDR.

Over two thousand East Germans escaped to West Germany, through Hungary, in June 1989. They were followed by 30,000 more in September. Unable to stop the flight of its citizens, the SED was finally forced to grant the right of free travel to the West on November 9. Over 5 million

people crossed through the Berlin Wall to visit West Germany in the following four days.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is opening of the Berlin Wall mark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GDR. Once a large number of East Germans gained personal experience of life in the West, popular sentiment in favor of the West German system grew uncontrollably. Fearing the consequences of social breakdown in the GDR, the West German government felt it had no choice but to agree to the fastest form of unification,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his mainstream interpretation of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is promoted by South Korean authorities. It is also, as we see next, inaccurate.

Political Struggle in East Germany

Demands for reform of East German society were, as mentioned above, growing during the decade of the 1980s. What is not widely appreciated is that at the same time some East Germans were concluding that change was impossible and therefore looking to escape to the West, others were working to create a dynamic civic movement as part of a broader struggle for socialist renewal in the GDR.

This civic movement had three main roots : a church-supported peace movement, a secular human rights movement, and an environmental movement. Each began in the early 1980s as small, grassroots efforts at reform. Frustrated by their lack of progress, activists from all three movements gradually began building ties and working together to promote more broad-based political reform. When the government refused to seriously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growing exodus of people from the country, many decided the time had come to directly challenge their government's political practice and vision. In September 1989, a number of new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were formed, including the United Left, New Forum, Democracy Now, and Democratic Awakening. The Social Democratic Party was established in October, and the Green Party in November.¹⁾

While these new organizations represented a broad range of political philosophies and strategies, most of their members shared the goal of creating a vibrant civil society. They also shared an opposition to both capitalism and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Significantly, these groups succeeded in giving birth and direction to a powerful protest movement.

1) For a brief history of the civic movement and discussion of ideological and strategic differences between these newly formed political groups see Chapter 2, "Protesting for Freedom," in Konrad H. Jarausch, *The Rush to German Un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This protest movement started in Leipzig, on September 4, 1989, when a small group of activists demonstrating for the right of free travel were attacked by police. In response, new demonstrations were held on successive Mondays, each one attracting more people than the last: 5000 people on September 25; 20,000 on October 2; 70,000 on October 9; and 110,000 on October 16. The demonstrations also became increasingly national. Over 675,000 East Germans demonstrated on October 23 and over 1 million marched on October 30. Equally significant, the demands of the demonstrators were changing over time, from demands for the right to travel to demands for fundamental political reform. The police, overwhelmed by the size of the demonstrations, were eventually forced to yield the streets to the protesters.

The biggest demonstration took place in Berlin on November 4. Approximately 1 million people attended, most chanting slogans calling for "revolutionary renewal." The East German media televised the entire protest. Clearly, more was happening in East Germany than an exodus of people. A civic revival was taking place as growing numbers of people demonstrated their willingness to struggle to create a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direct democracy and an economic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worker control, social solidarit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The West German Unification Offensive

The West German Political elite was initially unsure how to respond to the East German civic movement. To support it meant giving encouragement to its attempt to breathe new life into socialism, something the elite clearly did not want to see happen. Opposing it, however, meant siding with the SED in its struggle to maintain power. It was West German Chancellor Helmut Kohl who led the way out of this quandary. By changing the focus of the East German public debate from reform to unification, he was able to weaken both the civic movement and the SED.

Kohl first advocated pursuing unification in early September 1989, during a parliamentary debate over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flight of East Germans. He did so again, approximately one month later, but this time in a major public address on November 8, after the East Berlin rally, but before the opening of the Berlin Wall. After praising the East German demonstrators for their courage, he called for "free self-determination of all Germans." His message was clear: the West German government was encouraging the East German people to renounce revolutionary renewal and seek relief through unification.

Both the East German government and its opposing civic movement rejected this appeal for unification. The newly elected prime minister, Hans Modrow, did, however, express his willingness to explore "cooperative coexistence" or "a treaty community between two independent states." The civic movement made its position clear in a November 26 statement: "Either we can insist on GDR independence" and work to "develop a society of solidarity, offering peace, social justice, individual liberty, free movement, and ecological conversion" or "we must suffer ... a sell-out of our material and moral values and have the GDR eventually taken over by the Federal Republic."²⁾ Within two weeks, two hundred thousand people had signed the statement.

Kohl continued to keep the pressure on. In response to Modrow's call for closer ties, he offered, on November 28, a "Ten-Point Plan for German Unity." Under the terms of the plan, West Germany would provide the GDR with economic assistance, but only after the GDR committed itself to free elections and a market economy. The plan also called for German unity to be firmly grounded in "a common European house," by which Kohl meant that a united Germany would become a member of the (West) European community. In short, this was a plan for East German surrender to West Germany.

The East German civic movement struggled to find an alternative to unification with the West and the status quo of East German state socialism. And, in an attempt to chart what it called the Third Way, the civic movement agreed to participate in a national Round Table with the government and other 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The Round Table's work was greatly complicated by the country's growing economic crisis. The East German government had allowed approximately 30,000 people to emigrate in 1988. Approximately 40,000 had been allowed to leave in the first half of 1989. The total grew to almost 350,000 by the end of the year. Two-thirds of those leaving were skilled workers; one-sixth had completed college. The loss of so many skilled workers caused a devastating decline in industrial production as well as a breakdown in basic social services.³⁾

Hoping that a freely elected government would have sufficient popular support to halt the outflow of people and resulting economic slide, Modrow announced, in February, that the date for national elections would be advanced from May to March 1990. He also invited grassroots leaders to join him in a government of "national responsibility." The new government quickly proposed a series of

2) Ibid., p. 67.

3) Ibid., p. 240.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and called upon the West German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Kohl, however, refused to consider giving any aid to the Modrow government, saying that all questions of money would have to wait until after the March elections. In fact, confident that events were moving his way, he continued to raise the specter of East German collapse, hoping to frighten the French and Soviet governments as well as the East Germans into endorsing the fastest form of unification possible — unification by absorption. As one measure of his success, Kohl won foreign support for a German currency union which would require the East German government to agree to a market-based economic transformation suppor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West German DM (Deutsche Mark). Kohl was now demanding that the East German government give up control over its economy. Clearly, once that happened, the East would lose all ability to engage in meaningful political negotiations over the terms of unification.

The Round Table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Kohl's proposal and responded by demanding that West Germany stop destabilizing the East and provide 10 to 15 billion DMs to support economic reform. It also called for a joint study of the effects of the proposed currency union. The Round Table also made its position on unification clear: it should be the end result of a gradual process, the final treaty should include a social charter to protect the rights of East Germans, and the new Germany should be committed to the principle of disarmament.

Not surprisingly, the West German government rejected the Round Table's proposals and reaffirmed its previous position that there would be no economic support until after the March election and then monetary union must be the next step. In effect, Kohl offered East Germans a simple choice: vote for parties favored by the West and receive DMs followed by a rapid unification; vote against the West and receive no assistance.

Leaving nothing to chance, West German political parties (with the exception of the Greens) sought to control the March election process. Each adopted and shaped their opposite number in the East, providing them with speakers, consultants, money, and equipment. They even used West German media to broadcast messages back to the East.

Kohl traveled to the East many times to help form a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led alliance of conservative parties. Now he campaigned hard for it. This alliance supported unification under the terms of Article 23 of the West German Basic Law, which allowed former (German) states or regions to rejoin (West) Germany. Kohl promised East Germans that a vote for the CDU and its

allies would be a vote for "instant prosperity." Kohl's hard work paid off,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and its allies won the election, receiving approximately 48% of the vote. Kohl would now be negotiating unification with his opposite number, Lothar de Maiziere, who owed his own success to Kohl.

On July 6, at the first meeting to negotiate the terms of unification, de Maiziere asked for a "unification treaty." By this he meant that East and West Germany should jointly decide on new constitutional goals and economic arrangements for a new united Germany. In response, the West German negotiator stated: "This is the accession of the GDR to the FRG and not the reverse. We have a good Basic Law that is proven. We want to do everything for you. You are cordially welcome. We do not want to trample coldly on your wishes and interests. But this is not the unification of two equal states."⁴

The negotiator was right. Unification by absorption meant that East Germans would be denied any opportunity to help create a more democratic Germany. Significantly, the same was true for West Germans. Unification by absorption foreclosed attempts by many West German social groups to secure greater constitutional guarantees for gender equality, multiculturalism, worker rights, and direct democracy.

German unification officially took place on October 3. I have described the process in detail in order to refute the conventional wisdom which holds that the collapse of the East left the West with no alternative but to pursue a rapid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As we have seen, quite the opposite was true. Kohl had many opportunities to pursue a gradual union of the two Germans. In fact, he rejected several East German initiatives which would have contributed to that goal, the first from the East German government, the second from the Round Table, and the last from the leader of the eastern CDU. In short, Kohl aggressively pursued a policy designed to ensure the impossibility of a slow and structured unification process. His goal was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and he achieved it.

Economic Costs of Absorption

All accounts of German unification agree that it has been costly. Most analysts explain this by arguing that the East German economy was far weaker and thus needed considerably more support than was expected. However, as we will see in this section, this explanation is misleading. The reality is that the high costs associated with unification are largely a consequence of the West's insistence on achieving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⁴ Ibid., p. 170.

As mentioned above, the flight of East Germans, as many as 4000 a week in early 1990, made economic stabilization all but impossible. Those who remained grew more desperate and envious of West German prosperity. In February, Kohl, having rejected previous East German requests for financial aid, announced that the West was willing to provide East Germans with DMs, thereby boosting eastern purchasing power, if the East German government would agree to a Monetary Union.

Although the proposed currency conversion received the greatest attention, the Monetary Union was much more than an agreement regulating the introduction of DMs into East Germany. It actually mandated a complete economic takeover of the East by the West, requiring the GDR to abolish its planned economy, introduce private enterprise, and accept the West German legal and political order. Although over two hundred thousand Berliners demonstrated against the union, it was agreed to by the newly elected CDU-dominated East German government in March, and went into effect of July 1, 1990.

According to the treaty, East Germans would, beginning July 1, receive wages and salaries in DMs equal to what they had been paid in East German marks. Personal debts, on the other hand, would be converted at the rate of 2 East German marks to 1 DM. The conversion of East German personal savings was to be made according to a sliding scale. Children under 15 years of age would be able to exchange up to 2000 East German marks at parity. The level was raised to 4000 marks for adults under 60 and to 6000 marks for those over 60. Savings held above these levels had to be exchanged at the rate of 2 East German marks to 1 DM.

This conversion plan initially appeared advantageous for East German consumers. The official exchange rate, before the monetary agreement, was 4.4 East German marks to 1 DM. The agreement, therefore, not only made West German goods more easily available to those in the East, it also reduced their price. As it turned out, this potential gain was overwhelmed by other aspects of the agreement. For example, the treaty called for reducing the East German budget deficit by eliminating state subsidies for basic goods and services. Without the subsidies, prices of these goods doubled and in some cases tripled.

The treaty also required East Germans to pay new income taxes and contribute to insurance and retirement funds. With both prices and social payments rising, average real disposable income in the East actually fell.⁵⁾ Most East Germans also experienced a decline in their wealth. Because of the high level of personal savings in East Germany, the effective exchange rate turned out to be

5) Ibid., p. 149.

approximately 1.8 East German marks to 1 DM. Thus, nearly half the value of personal savings was lost in the currency conversion.⁶⁾

East Germans lost even more as workers than they did as consumers. East German firms were being forced to compete against their more modern West German counterparts at the same time that the relative cost of West German goods to East German consumers was being reduced. To make matters worse, West German suppliers pressured East German retailers to stock only West German goods. Perhaps not surprisingly, most East Germans used their new DMs to purchase West German goods, causing a noticeable increase in West German production and East German unemployment.

East German firms were additionally hampered by the fact that they faced a different conversion formula than did East German individuals. Their liquid assets were converted at the rate of 2 East German marks to 1 DM while their debts were converted at the rate of 1 to 1.⁷⁾ The resulting financial squeeze forced many firms into bankruptcy.

An even more significant blow to the East German economy was the West German insistence on immediate privatization of East German firms. The Round Table had tried to restructure the East German economy by creating a holding company whose mission was to transform state firms into joint stock companies and divide the assets into shares for government (federal, state, and local), foundations, and individuals. On July 1,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etary agreement, the holding company was ordered to privatize its assets as quickly as possible.

West Germans were put in charge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which was organized in ways that benefited West German investors at East German expense. For example, they instituted a system of closed bidding, allowing West German firms to purchase the best East German firms at attractive prices. Many of these firms were later shut-down, having been purchased only to ensure that they would not become competitors.⁸⁾ Firms that could not be privatized were usually shut-down by the holding company.

Business Week described the economic impact of the Monetary Union on eastern Germany as follows :

6) Dorothy Rosenberg, "The Colonization of East Germany," *Monthly Review*, Vol. 43, No. 4 (September 1991), p. 17.

7) Ibid., p. 17.

8) "Germany : is Reunification Failing?," *Business Week*, November 15, 1993, p. 49.

Across the eastern landscape, the dismantling of communism has swept 3.5 million people into the ranks of the jobless. With 70% of its productive capacity shut down, the old industrial star of the Soviet bloc remains a heartbeat away from economic collapse.⁹⁾

True, after plunging 50% from 1989 to 1991, eastern Germany's economy turned up 9.7% in 1992 and will likely maintain a 7% to 8% growth rate in coming years. But at that rate it will still take until the turn of the century to achieve 1989 levels of gross national product.¹⁰⁾

Kohl's promise to West Germans that unification would be costless, easily financed out of economic growth, also turned out no better than his promise to East Germans that they would enjoy "instant prosperity." The acceleration of the East German economic declin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monetary treaty greatly reduced government revenues in the East at the same time that the growing unemployment and poverty generated greater demands for assistance. In 1991, Kohl was finally forced to take action: he began an Eastern Recovery Program financed by an income tax surcharge of 7.5% on west Germans. Additional funds were obtained by large scale public borrowing.

This strategy hit west German workers hard. The borrowing forced up interest rates, driving the western German economy into recession in 1993. The combination of the recession and desperation of eastern workers gave west German corporations the leverage they needed to bread previously binding national labor agreements and force western workers to accept lower wages and more "flexible" work rules. Many corporate leaders seek the dismantling of the country's social-welfare system.¹¹⁾

Social Costs of Absorption

Most studies of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are content to define the costs of absorption in narrow "economic" terms. There is, however, a far uglier side to the German absorption process. Central to that process was the deliberate destruction by the West German state of any potential social or ideological threat to the existing West German political-economy. For example, all East German universities were ordered to close their departments of Marxism-Leninism and restructure their departments of History, Law, Economics, Philosophy, and Education. All faculty in these department were fired. All East German faculty, regardless of their host department, lost their tenure. Moreover, all faculty members, research associates, and technical administrative personnel

9) Ibid., p. 48.

10) Ibid., p. 49.

11) "Finally, Germany is Paring The Fat," Business Week, October

were requir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which asked about their political opinions and activities as well as past and present party affiliations. Many were dismissed as a result of their answers. Public school teachers, even daycare and kindergarten teachers, were subjected to a similar "evaluation" process with similar results.¹²⁾

Those in the civil service were also dealt with harshly. The entire East Berlin judiciary was dismissed. In all, approximately 550,000 civil service employees were terminate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such actions legal, finding them "necessary in order to construct a modern, efficient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quickly."¹³⁾ In many cases, west Germans, often commuting daily or weekly, now fill administrative positions in eastern Germany.

The West German state has justified these actions by cleverly modifying its traditional anti-communist propaganda. In the past, East Germans were portrayed in the West as helpless victims of communist totalitarianism. After unification, however, the west German state and media quickly transformed these same victims into active supporters of the past communist system. Destroying GDR public institutions became insufficient, those who had worked in them also had to be punished. In this way, the West German state has been able to argue that East Germans have only themselves to blame for whatever suffering they have experienced after unification.

Although there is no simple way to total up the costs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the following statistics make clear that they have been enormous: from 1989 to 1993, the birth rate per 1000 people in eastern Germany fell by 60%. from 1989 to 1991, the fertility rate of east German women aged 25 to 34 fell by over 45% and fell further in 1992. In 1992, the number of marriages per 1000 people was less than half what it had been in 1989. Finally, death rates for men and women aged 35 to 44 rose 20 to 30% between 1989 and 1991. As *Business Week* noted in reporting on these statistics, "Such changes are unprecedented for an industrial country at peace. The drops in births and marriages even eclipsed those that occurred in Germany in the final years of World War II."¹⁴⁾

Three main points stand out from the above examination of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First, the collapse of the GDR was, to a considerable extent, triggered by deliberate West German state policy. Other outcomes, in terms of both the direction of political change within East Germany and the unification process, were certainly possible. Second, absorption has been an economic and

12) Dorothy Rosenberg, *op.cit.*, pp. 25-29.

13) As quoted in *Ibid.*, p. 27.

14) Gene Koretz. "The Population Plunge That's Wracking Eastern Germany," *Business Week*, August 29, 1994, p. 20.

social disaster for those in the east as well a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ostly for workers in the west. Third, the West German state pursued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because it wanted to ensure, if not actually strength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hegemony of existing West German institutions in a new united Germany. These conclusions are relevant to the Korean situation precisely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proclaims unification by absorption as its goal.

South Korean Unification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modeling its unification policies after those followed by West Germany. For example, in the period following the division of Germany, West Germany refused to recognize the East German government or any government with which it had relations. Its goal was to isolate the GDR and force it to accept a unification process based on "free elections" which, given the West's larger population, was considered likely to ensure West German control over a unified German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llowed a similar policy. It refused to recogniz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malize relations with any country that did. Having twice the population of the North, it also insisted that Korea be unified through "free elections."

By the late 1960s, many in the West German government had given up hope of collapsing the GDR through a policy of open hostility. Newly elected West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 therefore called for a new foreign policy based on expanding, not limiting, contacts with East Germany and the surrounding communist countries. The West German government adopted this Eastern policy (*Ostpolitik*) because it believed that closer contact with East Germany and the other Eastern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would work to its advantage, both by reducing regional tensions and by strengthening the West's international position relative to that of the East.¹⁵⁾ Beginning in the early 1970s, South Korea, for somewhat similar reasons, began revising its own policies toward the North and communist countries.

Inter-Korean Relations

Before the early 1970s, South Korea had refused a number of North Korean initiatives to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for example, North

15) Although *Ostpolitik* was not promoted as a vehicle for achieving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the policy did prove helpful. West German ties with East Germany helped to promote the latter's economic dependence on the former, thereb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East to resist the West German unification offensive. West German ties with socialist countries, most importantly the former Soviet Union, greatly reduced socialist opposition to the West's absorption of the East.

Korea made several proposals to increase North-South contacts, including political conference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mutual visiting privileges,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In 1960, Kim Il Sung offered a plan for achieving reunific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nfederation of the two Koreas. According to this plan, although North and South Korea would continue to maintain their own distinct socioeconomic systems, the increased contacts made possible by confederation would eventually allow for Korea-wide elec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t only rejected these initiatives, it offered no specific counter-proposals. This was largely because the South was economically, socially, and politically less stable than the North and feared the outcome of any negotiations. Park Chung Hee, who took power in the South in a 1961 military coup, specifically opposed any negotiations with the North, citing the need to first develop south Korea's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

With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shifting the economic and military advantage away from the North, Park issued a call in the early 1970s for a North-South Competition of Good Will.¹⁶⁾ More specifically, he called for steps to be taken to "normalize" North-South relations. These steps included humanitarian,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simultaneous admission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to the United Nations.

The North rejected these proposals, arguing that they were designed not to advance the reunification process, but to allow the South to secure a stable division of the peninsula. It responded by calling for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South,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etween North and South, the formation of a confed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shared UN delegation. The South, in turn, rejected these proposals, arguing that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agree t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howed that it was not serious about unification, but only interested in dominating the South.

In 1980, Kim Il Sung offered a new, more detailed proposal for achieving reunification through confederation (the Koryo Democratic Confederated Republic). In 1982, South Korean President Chun

16) The turning point seems to have been 1975. Up until then, according to the US CIA, the North outproduced the South on a per capita basis in almost every sector. See Stewart Lone and Gavan McCormack, *Korea Since 1850*,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3, p. 187. Similarly, 1975 marks the year when South Korea passed the North in military spending. It has outspent the North in every year since. See Stephen Goose,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John Sullivan and Roberta Foss, editors, *Two Koreas -- One Future?*, Marylan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p. 59.

Presentation 1 - Martin Hart-landsberg

Doo Hwan responded by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Agreement on Basic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followed by the creation of a Consultative Conference for national Reunification (to draft a constitution for a unified Korea). Chun's Provisional Agreement was, however, no more than a restatement of Par Chung Hee's earlier "step-by-step" approach to normalization.¹⁷⁾

South Korea's most recent proposal for achieving reunification was made in 1989 by President Roh Tae Woo. His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called fo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leading to the adoption of a Korean National Community Charter which would include ground ru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ommonwealth. Eventually, agreement would be reached on a constitution for a united Korea and a Korea-wide voting process to approve it.¹⁸⁾

Although more far reaching than past proposals,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continues to promote the same basic approach to unification as past South Korean initiatives: it demands that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exchanges take place before negotiations to settle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This is the reverse of the North Korean approach. For example, under the Korean Commonwealth arrangement, North and South Korea are encouraged to develop closer social and economic military issues. In contrast, under the Koryo Democratic Confederated Republic arrangement, North and South Korea are encouraged to develop unified political and military policies while maintaining separate socio-economic systems.

With each side restating, although in more elaborate form, the same basic proposal that was already rejected by the other side, it is not surprising tha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much less advancing unification. West and East Germany were able to agree on a framework in 1972 for "normalizing" inter-German relations, largely because the West German government was willing to recognize the national legitimacy of the GDR.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unwilling to grant each other such legitimacy. Each has been primarily interested in using the inter-Korean dialogue to assert its claim to be the only true representative and defender of the Korean national interest and to test the political resolve of the

17) For a presentation and discussion of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reunification proposals from the division of Korea until 1983, see Bong-youn Choy, *A History of the Korean Reunification Movement: Its Issues and Prospects*, Peoria, Illinois: Research Committee on Korean Unificat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Bradley University, 1984.

18) For an official South Korean government perspective on Roh's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see Kim Hak-Joon, "Korean Reunification: A Seoul Perspective," in James Cotton, editor, *Korea Under Roh Tae-Woo: Democratization, Norther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Australia: Allen and Unwin, 1993.

other. Although neither state has yet been able to force the other to accept its terms, as we see next, the recent success of South Korea's Northern Policy has greatly strengthened its "negotiation" muscle.

The Triumph of the Northern Policy

Following the logic of West Germany's Ostpolitik, South Korea also ended its past policy of opposing economic and political ties with socialist countries. In his 1973 New Foreign Policy for Peace and Unificatio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 declared that "South Korea will open its doors to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urges those countries whose ideologies and social institutions are different from ours to open their doors likewise to us."

¹⁹⁾ This new approach to the socialist world, eventually known as the Northern Policy (Nordpolitik), was pursued largely in an attempt to enhance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nd isolate the North.²⁰⁾

In 1988, however, President Roh Tae Woo announced that the Northern Policy would no longer be pursued at North Korean expense. In his July 7, 1988 Special Declaration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lf-esteem, Unification, and Prosperity, he said that South Korea was "willing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it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countries friendly to u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in tandem with this, we will continue to seek improved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China,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²¹⁾

19) As quoted in Bong-youn Choy, *op.cit.*, pp. 107-108.

20) South Korea found its attempt to isolate the North counterproductive. The North enjoyed strong Third world support throughout the 1960s while the South had its application for membership in the non-aligned movement rejected in 1973. External pressures also played a role in South Korea's decision to adopt a variant of West Germany's Ostpolitik. The US, seeking to establish closer relations with China, began pressing South Korea to change its foreign policy so as to reduce regional tensions. According to Kim Hak-Joon, spokesperson and senior press secretary to 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 Woo, "Arguing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Korean situation it would first be necessary to ease the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Morton Abramowitz [who was in charge of the Korea desk at the State Department, wrote a key policy paper in which he] advised Seoul to recognize North Korea which would bring relations on the peninsula into lin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He stressed that Seoul needed a Nordpolitik, making what was, at least in published records, the first clear reference to a northern policy." See Kim Hak-Joon, "The Republic of Korea's Northern Policy: Origin, Development, and Prospects," in James Cotton, editor, *op.cit.*, p. 250.

21) Roh Tae Woo, "July 7, 1988 Special Declaration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lf-esteem, Unification, and Prosperity," in *Ibid.*, p. 317.

Hong Chul Yum, Roh's presidential secretary, described the difference between Roh's approach to unification and those of past south Korean presidents as follows :

Whereas our government's Northward Policy in the past had been primarily either for security concerns, or for the assurance of superiority to and isolation of North Korea, the Northward Policy of the Sixth Republic was now based on the spirit of the July 7 Declaration. This marked a great turning point when viewed from South Korea's shift in its position toward the North--from an adversarial confrontation toward that of national community and the welcoming of the North. ²²⁾

Actually, the only thing new about Roh's Northern Policy was its effectivenes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many socialist countries actively pursued greater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s part of a broader program of market-based economic reforms. South Korea, enjoying another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wa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development and use the many contacts generated by its 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s to negotiate a number of new economic agreements with these countries. Full diplomatic relations followed soon after : Hungary, Poland, and Yugoslavia in 1989 ; Czechoslovakia, Bulgaria, Romania, and the USSR in 1990. In return, Hungary received \$450 million in aid, Poland \$500 million, and the Soviet Union \$3 billion. South Korean relations with China developed more slowly, but by 1990 each country had opened an official trade office in the other's capital ; full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92.

South Korea's diplomatic success was not, public pronouncements to the contrary, coupled with any fundamental change in the government's to the contrary, coupled with any fundamental change in the government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As in the past, it sought to use its diplomatic gains to isolate and weaken the North. The issue of UN membership offers perhaps the best illustration of this fact.

As noted above, South Korea had proposed, as early as 1973,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become members of the UN. The North, with support from the USSR and China, had firmly opposed this plan. In 1990, Sou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once again pursue membership in the UN, regardless of North Korean intentions. This time, primarily because of its new diplomatic and economic contacts, it was able to convince both the USSR and China to support its application.

²²⁾ Hong Chul Yum, "The Unification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1990s," *Asian Perspective*, Vol. 14, No. 2(Fall-Winter 1990), pp. 78-79.

The North was left with no choice but to announce, as it did in May 1991, that it would also seek membership in the UN. South Korea achieved its victory in September with the simultaneous entry of both Koreas into the UN.

Pursuing Unification by Absorption

Roh's early statements calling for a new and mor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North were most likely made to support his Northern Policy ; an openly hostile policy to the DPRK would have made it more difficult for socialist countries to accept closer relations with South Korea. Although it is unlikel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any real interest in or expectation of greater contact with the North in 1988, this was to change over the next two years. By 1990,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particular German unification, led South Korean policy-makers to give serious attention to expanding inter-Korean relations in hopes of recreating the German experience. ²³⁾

South Korea's international gains had been matched by North Korean setbacks. At the same time that North Korea faced growing internal economic problems, the socialist world was disappearing. In 1990, the year East Germany collapsed and was absorbed by the West, the Soviet Union announced that it was ending its special economic arrangements with North Korea. Adding to North Korean worries, the US, charging North Korea with pursu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demanded that it open its military facilities to international inspection or face possible attack.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this situation, south Korea actively engaged North Korea in negotiations. Knowing that the North was in need of foreign investment to reverse its economic declin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omised substantial economic support once the North agreed to accept humanitarian,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with the South and open its nuclear program to outside inspection. The South hoped that greater social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would lead North Koreans to reject their own system, eventually triggering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approach to unification had nothing to do with Roh's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²³⁾ According to Kang Suk Rhee, a professor at the south Korean National Defense college, "South Korean politicians, scholars, journalists, and business leaders wasted no time in traveling to unified Germany to observe its experience, an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Seoul have invited many Germans to South Korea to lecture and conduct seminars on such topics as the 'German Experience of National Re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 See Kang Suk Rhee, "Korea's Unifica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German Experience," *Asian Survey*, Vol. XXIII, No. 4(April 1993), p. 360.

Presentation 1 - Martin Hart-landsberg

Formula. It was a strategy deigned to recreate the German experience and produce unification by absorption. But, North Korea is not the GDR ; it is politically more unified and economically more self-sufficient. In spite of enormous pressure from South Korea and the US, Kim Il Sung continued to call for negotiations to settle key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before agreeing to exchanges, a "Grand National congress" to lay the groundwork for unification through confederation, and an end to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South. Aware of Roh's strategy, he declared, in his 1991 New Years address, that the south should have no illusions about achieving a German-style unification.²⁴⁾

By late 1991, some south Korean policy analysts, having had more time to study the economic costs of the German experience, were beginning to voice their own doubts about the desirability of the German model of unification. For example, the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a South Korean government-affiliated think tank, determined that a sudden and unplanned Korean unification, such as took place in Germany, might come with a ten year price tag of \$800 bill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have added yearly expenses of approximately \$47 billion for each of the first four years, an amount approximately equal to the government's current yearly budget. A slower, planned unification would, according to the Institute, greatly reduce these costs ; estimated government expenditures would be cut by more than half.²⁵⁾

By mid-1992,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ppeared to have been won over. Due to the predicted large financial costs involved, they publicly announced their support for a gradual, as opposed to rapid, unification by absorption. They continue to express their willingness to work with the North to Help it stabilize and reform its economy. Significantly, analysts of almost all political persuasions have taken the government at its word. In my opinion, they are wrong to do so.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of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is that it is not possible to achieve a gradual unification by absorption. The West was able to absorb the East only because of the prior collapse of the GDR. A viable East German government would not have accepted its own total destruction. It would have demanded, as part of a gradual process of unification, the creation of new German institutions. That, however, is precisely what the West German elite did not want and that is why the West German government repeatedly refused to offer the economic support necessary to stabilize the GDR. Seen from this perspective,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24) Rinn-Sup Shinn, "North Korea : Squaring Reality with Orthodoxy," in Donald N. Clark, editor, Korea Briefing, 1991, Colorado : Westview Press, 1991, p. 119.

25) See Kang Suk Rhee, op.cit., pp. 372-373.

the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absorption were of secondary concern to the West German government. Moreover, to the extent that those costs are expressed through lower wages and weaker unions, they are being paid disproportionately by German workers, not the West German political and corporate elite.

I believ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stands this lesson. And, recognizing that gradual unification by absorption is impossible, it remains committed to absorption at the expense of gradualism. For the South Korean elite, the potential economic and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pale in significance with the benefits, most importantly, the strengthening and expansion of existing South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and institutions.²⁶⁾ The following examinat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North provides support for my argument.

South Korean economic policy towards the North. As part of its Northern Policy described abo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lifted its embargo on (indirect) trade with North Korea in October 1988. Total trade (indirect and processing) rose from \$1 million in 1988 to between \$200 and \$300 million a year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90s. At the same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fused to allow the kind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at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North Korean economy : large scale South Korean investment in and technology transfer to the North.

In February 1989, the group chairman of Hyundai,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encouragement, visited North Korea. While there he negotiated several agreements, including one to develop a major tourist resort near Mt. Kumgang. Shortly after his return to Seoul,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drew its permission for the project.

Similarly, in January 1992, the group chairman of Daewoo visited the North, again with government encouragement. While there he negotiated a number of agreements, including participation in several joint-ventures to produce light manufactures in the Nampo industrial estate.

26) The following quote from Business Korea highlights one reason the South Korean elite opposes gradualism : "... if South and North Korea move closer to genuine reconciliation, or even reunification, the social atmosphere will be loosened with less rigid government controls and social norms, which could contribute to more active labor movement controls and social norms, which could contribute to more active labor movements [in the south]. The infiltration of socialist principles into the country's labor unions may increase, leading to a toughened stance toward management and authorities." See Sohn Jie-Ae, "Older, But Wiser," Business Korea, July 1994, p. 25.

Yet, within a month of his retur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rdered a halt to Daewoo's participation in these ventures. In November, it went further, ordering a total ban on al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he official reason given for the ban was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open its nuclear facilities to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spection. Yet, North Korea did allow the IAEA to make six separate inspections during 1992. It did not announce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until March 1993. Moreover, even then, according to an economic consultant writing in *The Korea Economic Weekly*, "Throughout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southern companies detected no change in their northern counterparts' willingness to do business."²⁷⁾

significantly, it 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seeks to place limit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will allow only indirect and processing trade, not the substantial investments sought by both South Korean corporations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It w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argued for economic exchanges before political and military negotiations. And, it w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announced its desire to support economic reform in the North in order to avoid economic collapse there.

Sou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its ban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caused by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clarify its nuclear intentions are being put to the test. On October 21, 1994, the US and North Korea signed an agreement that was designed to resolve the issue. North Korea has agreed to freeze its existing nuclear program, accept international inspections, and replace its old graphite-moderated reactors with militarily less dangerous light-water ones. In response, South Korean President Kim Young Sam announced a partial lifting of its ban. But, while this policy change will allow southern firms to visit the North to conduct feasibility studies, encourage more reprocessing trade, and allow Southern companies to train Northern workers, actual investment remains carefully controlled. If granted government permission, South Korean firms to visit the North to conduct feasibility studies, encourage more reprocessing trade, and allow Southern companies to train Northern workers, actual investment remains carefully controlled. If granted government permission, South Korean firms may now invest in the North, but with an upper limit of \$5 million a project. Daewoo, by comparison, recently announced plans for a \$300 million consumer electronics factory in Vietnam.

27) Michael Breen, "Trade and its Impact on Korean Unification," *The Korea Economic Weekly*, December 6, 1993.

South Korea has also sought to limit investment in the North by other countries. When the European Community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xpressed interest in exploring investment possibilities in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fused permission for a North Korean trade official to come to Seoul to make a presentation.²⁸⁾ Such actions point to only one conclusion: the South has no real interest in stabilizing the North Korean economy. Rather, it hopes that economic need will eventually force the North to accept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thereby leading to the rapid collapse and absorption of the DPRK.

South Korean efforts to influence Japan-North Korean relations. Roh claimed as part of his July 7th Declaration that he was ready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for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by declaring that it was ready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on all the issues pending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Unofficial talks between North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began in Pyongyang in September 1990. The talks concluded with an informal understanding that the two governments would meet soon and that as part of the normalization process, Japan would apologize for its past colonial exploitation and pay compensation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talks did begin in 1991, but rather than encourage their success, Sou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did what they could to limit their scop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strong US support, got the Japanese government to agree that its discussions with the North would be guided by "five principles."²⁹⁾ Most importantly, the Japanese agreed not to offer any money to North Korea until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fully normalized, to press the North to allow IAEA inspections of its nuclear facilities, and to do nothing to threaten "meaningful progress" in North-South relations. It is worth emphasizing that South Korea's attempt to slow the normalization proces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occurred after the South had already normalized relations with the USSR and was well on its way to establishing full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The South Koreans hoped that by linking payment of compensation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they could keep North Korea from receiving the needed fund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North Koreans, however, surprised both the South Koreans and Japanese by expressing interest

28) Kim Chang-young, "foreign Domination of N. Korean market Worries Business Circle," *The Korea Times*, October 21, 1994

29) See Perry Wood, "The Strategic Equilibrium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in James Cotton, editor, *op.cit.*

in a quick settlement of all outstanding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full diplomatic relations as soon as possible. The Japanese, under US pressure, then raised the issue of IAEA inspections. The Japanese then demanded information about a Japanese woman allegedly kidnapped by the North. Convinced that the Japanese were stalling, the North withdrew from the talks in November 1992.

While Japan appears to have respected South Korea's "five principles"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it was most likely US pressure that secured Japanese compliance.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US and North Korea signed their October 1994 agreement ending (for the momen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Japanese declared their interest in resuming talk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is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in contrast to its public statemen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sought to keep Japan from normalizing relations with and giving compensation to North Korea. Such efforts make sense only as part of an overall strategy designed to undermine the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n efforts to influence US-North Korean relations. The US, like Japan, responded to Roh's July 7th Declaration by seeking improved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response to North Korean calls for an end to Team Spirit War games, the withdrawal of US forces and nuclear weap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the US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allow US diplomats to talk to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limited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s, and the sale of humanitarian goods to the North. North Korean and US diplomats engaged in 23 counselor-level talks between December 1988 and May 1992, most often to discuss US charges that North Korea was pursuing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The US first accused North Korea of pursu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1989. The following year it demanded that the North ratify the nuclear safeguards treaty giving the IAEA authority to inspect its nuclear facilities. The North denied the US accusation and ruled out any IAEA inspections as long as the US maintained nuclear weapons in the South.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grew considerably more serious in 1991. The US labeled the DPRK a "renegade state" and charged that North Korea's alleged nuclear weapons program threatened the peace of Northeast Asia. In April, the South Korean Minister of Defense suggested a military strike to destroy the North's nuclear facilities. The US, having bombed Iraq into surrender during the Gulf War, began comparing Kim Il Sung to Saddam Hussein. Then, just when it appeared that a new Korean War was inevitable, all three countries took steps to defuse the

situati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joined the United Nations, the US announced the withdrawal of its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gned a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 as well as a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and the North signed and implemented the safeguards treaty permitting IAEA inspections.

Possibilities for a new era in North Korean-US relations were dashed, however, when, in late 1992, the US charged the North with having two secret nuclear waste storage sites and at least one nuclear weapon. The IAEA demanded the right to make special inspections of the sites. The North, denying US charges, refused the demand. When the US launched a new round of Team Spirit war games directed against the North, the DPRK declared its intention, in March 1993, to withdraw from the NPT.

The North eventually suspended its withdrawal after the US and North Korea agreed to hold direct talks. But, the DPRK refused to change its position on the special inspections and the US began organizing support for a UN sponsored embargo and war were averted, however, when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visited North Korea in June 1994, and won agreement for a new round of high-level US-North Korean talks. In spite of Kim Il Sung's death in July, these talks produced a framework accord in August and the previously mentioned October agreement designed to guarantee the non-military nature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as well as encourage better US-North Korean relations.

Si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publicly stated its desire to help the North avoid economic collapse and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certainly did not want a new Korean War, it should have been pleased with the agreement. In fact, the opposite was true. In an article headlined "South Korea President Lashes Out at US,"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Kim Young Sam "sai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on the verge of an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that could sweep it from power, and that Washington should therefore stiffen, not ease its position in pressing Pyongyang to abandon its suspected nuclear weapons program ... Mr. Kim explained that compromises might just prolong the life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 30)

The Financial Times of London described Kim's actions as follows:

It appeared at times during the past year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Kim Young-Sam, was hindering, rather than helping, the process to find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30) James Sterngold, "South Korea President lashes Out at U.S.," The New York Times, October 8, 1994.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the UN negotiated last autumn with North Korea to persuade it to return to the international nuclear safeguards treaty, Kim was describing as 'naive' Washington's conciliatory approach. He suggested at one point that the troubled North Korean economy should be allowed to collapse rather than being bolstered with international aid that would be granted in return for Pyongyang's compliance.³¹⁾

These quotes highlight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sperately wants to keep the North isolated and in crisis and is well aware that it must have US support to succeed. It is this support that is now in doubt. Already, as a result of the October agreement, the US government has followed the North in dropping a number of restrictions which formerly limited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first steps toward better US-North Korean relations, while noteworthy, are still largely of symbolic value. Moreover, the October agreement is sufficiently vague on a number of key points that differences of opinion leading to renewed ten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remain a serious possibility.³²⁾ Taking no chanc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ears determined to limit the potential significance of the October agreement. Most importantly, it is trying to establish a veto over US policy initiatives toward the North. Its strategy: demand that the US make any further improvements in US-North Korean relations conditional on prior improvements in South-North relations. Only if the US agrees to this demand can South Korean hope to sustain its strategy for achieving the collapse and absorption of the North.

An Alternative Approach to Unification

South Korea's unification by absorption strategy must be opposed for two main reasons. First, unification by absorption is not the way to create a democratic and independent Korea. As the earlier examination of the German experience revealed, unification by absorption is designed to strengthen existing class relations and institutions, not promote economic, political, or social reform. While the South Korean elite may be satisfied with existing conditions,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are not. Unification by absorption would only make it harder for that majority to continue

31) John Burton, "On the Front Line: Kim's Balancing Act--War and Peace," *The Financial Times*, December 31, 1994.

32) The US and the DPRK are already arguing over whether the agreement requires North Korea to accept South Korean constructed light-water nuclear reactors. The US says yes, the North says no. The actual document says nothing about the issue. See Eduardo Lachica, "Accord With North Korea So Complex Seems Only Few People Understand It," *Wall Street Journal*, March 21, 1995.

its struggle for social change.³³⁾

Second, even though it is unlikely that the South Korean strategy will succeed, the government's continuing effort comes with a high price tag. For example, the strategy has greatly increased economic suffering in the North. Maintaining hostile relations with the North has also enabl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use the existing National Security law to repress those who seek educational, workplace, political, and social reform in the South.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a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human rights environment in South Korea during 1994 largely due to abuse of that law.³⁴⁾ In addition, the continuing te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the South Korean strategy helps to sustain, provides a cover of legitimacy for militarists throughout the region as well as the US, not to mention greatly increasing the risk of a new Korean War.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activists can do to for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change its strategy. Within South Korea, activists must find ways to help people better understand what unification by absorption is designed to achieve. Outside of south korea, and especially in the US, activists must find ways to pressure the US government to pursue an independent and balanced policy towards North Korea. Most importantly, the US should end Team Spirit war games, withdraw its troops from South Korea,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North formally ending the Korea. A more independent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ll also encourag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DPRK. These steps will enable the North to stabilize its own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approach the unification dialogue with the South on more equal terms.

The collapse of the southern strategy for unification by absorption does not, of course, guarantee that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end their mutual distrust and agree to implement a unification process responsive to the needs and desires of the people of Korea. In fact, meaningful progress toward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and independent Korea is unlikely as long as the government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continue to resist popular participation in the

33) Significantly, even official South Korean government surveys on citizen attitudes toward reunification show a high degree of "support for unification, and support for a system different from the current South Korean system, ... a sign that unification may be viewed by some citizens as an opportunity and a method for bringing about system change." See Jin Min Chung and John D. Nagle, "Generational Dynamics and the Politics of German and Korean Unific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45, No. 4(December 1992), p. 857.

34) "The Offbeat File," *Business Korea*, January 1995, p. 50.

unification dialogue. To overcome this resistance, social movements in both Koreas must begin to develop their own independent criteria for a empowering unification process and demand that government-to-government negotiations take those criteria into account. This, in turn, requires that those currently working for social and political reform not only continue their efforts but also creatively consider ways in which the unification process can be structured to strengthen their work.

For example, growing numbers of South Koreans have become involved in movemen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ose involved must be encouraged to meet with North Koreans who share similar concerns so that both groups can begin discussing how to ensure that reunification will strengthen respect for the environment rather than open up new areas to be despoiled. Hopefully, such discussions will lead to connections that strengthen environmental movements in both the South and North as well as insights into how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can be shaped as part of the reunification process.

Similarly, the South Korean teachers union, which is currently working for educational reform in the South, should be encouraged to meet with its North Korean counterpart to discuss educational reform, in particular ways to develop and implement a new curriculum capable of promoting a new national identity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ocial solidarity. Women should also be encouraged to continue their existing inter-Korean dialogue over the meaning of women's rights and ways to structure a reunification process that deepens and protects those rights.

35) Greater contact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ocial groups will certainly make it harder for either government to restrict or narrow the reunification dialogue.

None of this will be easy. In the South, the government continues to use its National Security Law to restrict domestic reform efforts as well as contact with individuals and groups in the North. In the North, most social groups remain under tight government control and do not have the autonomy and independent perspective of many of the social movements in the South. Those outside of Korea, and again especially in the US, can help those inside Korea overcome these obstacles by speaking out against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abuses and by pursuing greater contact and dialogue with North Korean social groups. We are at a moment in history when our combined effort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unification process. After more than fifty years of division, we must not waste the opportunity.

35) See Jisoo Shin, "Korean Women Advance Reunification Movement," Korea Report, No. 16(Winger 1992-93) for an analysis of the first three meetings of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women.

<기초 발제 2>

남북한의 군사균형 -한국인을 위한 한반도

유진 케틀(미국, 전 해군제독)

한민족은 수세기에 걸쳐 역사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외세의 침략과 강대국들의 지배는 지난 시기 한반도에 잔인한 시련을 안겼다. 20세기 초 40여년에 걸쳐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 자행되었던 폭압과 착취는 그 좋은 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굴종의 기간은 전연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전 기간 동안 한민족은 일제를 몰아 내기 위한 민족공동의 노력에서 하나로 뭉쳐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체 한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반세기에 걸친 분단은 한반도에 더 큰 파괴와 아픔을 몰고 왔다. 분단은 1950~53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겪은 피해와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은 철저히 냉전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이 분단은 남한에 있어서의 유엔군, 실체는 미국의 군사 주둔을 정당화하는데 이제껏 이용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동서간의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냉전시대에 사로잡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남한에 아직도 남아 있는 37,000명의 미군 주둔일 것이다. 남한에 있어서의 미군 주둔

목적의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나온 '개입과 확장의 국가 안보전략'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and Engagement Enlargement)이라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자료는 '신태평양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보문제이다.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며 군사적 우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해외 주둔 정책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타민족과 국가들의 내정문제에 미국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냉전기간 동안 내내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 세계에 전진배치 시켜왔던 미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런데 냉전이 끝났다고 하는 지금에도 미국은 냉전시대에 유지해왔던 군사력에 의존한 영향력 행사 정책을 포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전 세계에 전진배치 시킨 미군을 (냉전이 끝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주둔시켜야 한다는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 냈다. 현재 미국의 공식자료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나라들-즉, 가상의 적-로 여섯 나라를 규정하고 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쿠바, 그리고 북한이 바로 그 여섯 국가다. 그런데 이 여섯 나라의 전체 국방비를 합한 액수인 150억불은 미국 예산으로 볼 때 약 3주간의 지출에 불과한 액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약한-여섯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군사력을 상호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나는 북한이 군사대치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백만 명의 군대가 북한이 군사적으로 갖고 있는 유일한 강점 혹은 우위라고 할까. 그러나 그것도 숫자에 있어서는 남한의 배라고 하지만, 북한이 그만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키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제력은 충분치 못하다고 본다. 미국 정보관계 기관들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는 1990~93년 사이 15%-30%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나라의 군사력마저도 상당할 정도로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료들만 갖고 보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넘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성은 북한이 남한을 순식간에 침략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군대와 막강한 무장력을 갖고 있다는 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이다. 1950년대와 달리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을 능가하지 못한다. 미 국방성이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북한의 침략군이란 실체에 있어 방어용(혹은 자위용) 군대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인구숫자에 있어 남한의 절반밖에 안되며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정하고 첨단기술에 있어 훨씬 낙후한 북한이 자위를 위한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에 대한 상은 이라크전쟁 직전 (미국에 의해) 이라크 군사력이 과대평가되었던 것과 같은 경우에 속한다. 북한의 공군력 또한 낙후한 비행기들과 비행 훈련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연료 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 해군력도 조그마한 경비정들로 이루어진 초라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 심지어 육군도 쓸만한 공병 트럭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다가 남한의 산들은 침략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갖고 있다. 또한 남한은 베트남전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의 전투경험을 갖고 있다. 남한의 인구 또한 북한의 두 배나 되며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12배가 넘는다. 첨단무기들로 무장된 남한의 군사력은 이면에 있어서 또한 북한을 능가한다. 특별히 남한은 최근에 들어와 탱크를 비롯 비행기와 군함들 같은 최신무기들을 자체 생산해내고 있다. 따라서 미군의 주둔, 개입과 상관없이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가설은 설득력을 잃는다.

다음은 전 윌리엄 크로우 해군 제독이 1989년 미 합참의장으로 있을 때 발표했던 (한반도 군사상황에 대한) 평가이다. 그가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의 평가에 의하면 구 소련과 중국의 개입이 없는 한 남한은 자체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을 처리해낼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남북한 간의 군사균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1989년 이후 한반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보다는 남한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또 북이 재래식 무장력만 갖고서는 남한을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북한이 위험한 나라라는 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마저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1994년 6월 13일의 북미기본합의서가 마련됨으로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달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 두 기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남한의 중심적 역할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일정정도의 변화가 보이면서 북미간 경수로회담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북미 상호간에 관계발전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그들의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재 처리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북미기본합의서에서 얻어낸 중요한 성과물들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할 때 그들의 핵무기 개발능력에는 그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의심은 주로 1989년 이후의 영변원자로의 재장전(refueling) 여부에 있었다. 몇 개의 연료봉이 추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대부분의 연료봉이 재처리 되었을 경우에 북한은 6~15 kg의 핵무기 제조 물질인 플루토늄을 추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북한에 핵폭탄 제조 기술이 있었다고 할 때 그들은 한 기 또는 두 기의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 두 개의 핵폭탄이 한 개 혹은 두 개의 발전대에 장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이 북한이 한 기 혹은 두 기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핵폭탄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상적인 이야기들의 전부다.

그러나 두 기의 핵폭탄을 가졌다 해서 그것이 실전에 배치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있어 거리가 멀다. 북한이 핵폭탄 제조와 관련하여 처했을 입장을 가정해 보자.

첫째 한번도 그들의 핵폭탄은(만약 있다고 할 때) 실험된 적이 없다. 실험해 보지 않은 무기를 사용할 군 지휘관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둘째 그들이 만약 어떤 핵폭탄 운반체계(delivery system)를 선택했다고 혹은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 그들이 개발한 무기가 그 체계에 맞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 개발된 핵폭탄을 미사일이나 폭격기에 탑재하는 일은 몹시 어려운 문제이다. 핵폭탄 운반 차량 문제가 설혹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핵폭탄을 미사일이나 비행기에 실어 운반·발사할 때에 따르는 종합적인 안전의 문제는 철저하고도 반복적인 실험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

나는 미 해군에서 핵폭탄을 탑재해 나르는 폭격기 조종사였다. 나는 핵폭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고 많은 조사를 했었다. 이 과정은 철저한 실험·검증, 그리고 무수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훈련비행은 불합격으로 평가 나기가 십상이었다. 주로 고도의 훈련된 핵폭탄 탑재기 조종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실수나 기술상의 문제들이 따랐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시키기 위해 거의 완벽한 기능을 습득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철저한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결여된 채 또한 핵무기 자체의 성능이나 실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받지 않은 조종사들을 전투에 내보낼 지휘관은 이 세상에 없다.

앞에서 밝힌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설사 생산해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나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더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이 일본 본토에 사용했던 최초의 핵폭탄의 무게가 무려 10,000파운드였는데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었던 비행기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비행기인 B-29폭격기로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좋은 질문이 있다. ‘당신의 적이 1,000기 이상의 더욱 강력하고 정확하며 성능이 검증된 핵폭탄을 갖고 상대방을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와도 같다. 또 그것이 한 기든 두 기든 상관없이 단 한 기의 핵무기 폭발만으로도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남북한에 대한 군사력 평가에 근거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북한은 군사적으로 남한에게 전혀 위협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남한을 공격할 만한 군사적 수단이 나 그 어떤 합리적인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2. 한반도에 있어서의 실제 위험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과 그들의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비롯된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 봉쇄를 비롯, 정치적 고립을 강제하고 군사적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공격적으로 대할 때 상대적으로 약하고 방어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북한은 그들의 자구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 넣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들의 적에게 무릎을 꿇느니 차라리 잃을 것이 없다는 마지막 자구책으로 전쟁도 불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취하는 공격적인 정책이나 행동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비극을 다시 겪게 할 수도 있다.

나는 현재의 상황이 한민족 전체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희망적이다. 오랜 기간에 걸친 외세의 침략과 강점에 의해 자행된 억압과 고통이 이제 사라질 조짐을 보인다. 상황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통일되고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한반도의 탄생을 전망케 한다. 전체 한민족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통일된 나라의 출현을 꿈꾼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들에 의해 풀려야한다. 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21세기에 있어서의 한국의 발전을 희망한다.

<Presentation 2>

Military bal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 Korea for the Koreans

Eugene J. Carroll (Retired Rear Admiral, USA)

You, as South Koreans, are citizens of a divided Korean nation. In many respects, history has been unkind to you -- and to all Koreans -- over the centuries. The cruelest periods have always involved foreign domination during which the people of Korea have been subjected to the unwanted presence and authority of powerful nations.

The Brutal occupation and exploitation of all Korea by the Japanese during the first 40 years of the 20th Century was such a period. In one sense it was a tragedy but on the positive side it did strengthen the sense of unity throughout the entire Korean nation. All Koreans suffered a common oppressor and this gave you a common purpose -- to red yourselves of the Japanese presence.

But what followed the expulsion of the Japanese at the end of world War II has been even more devastating to the goal of one Korea and the well being of all Koreans. The destructive partition which has continued for 50 years was entirely artificial, dictated by the politics of foreign powers with no concern for the Korean people. The division was

deepened and hardened by the bloody violence inflicted on Koreans, North and south, during the Korean Peninsula War of 1950-53. The North-South partition became an active part of the Cold War, used to powerful United Nations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Cold War is over and the East-West struggle for hegemony over the Korean Peninsula has ended, one legacy of the cold War remains in South Korea. 37,000 American troops stay on in the ROK and there is no plan, no schedule for their withdrawal. Why do they remain?

Part of the answer to that question can be found in the words of President Clinton in a document titled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hich the White House released in February of this year. Describing America's priorities in Asia he said, "Security is the first pillar of our new Pacific community. We will maintain an active [military] presence and we will continue to lead."

This is a candid declaration that U.S. military presence in foreign countries is considered to give America influ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those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U.S. foreign policy became heavily dependent on the forward presence of U.S. forces all over the world and we are now reluctant to surrender that influence.

In order to provide military justification for a continuing U.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enemies. At the present time the United States has officially designated six nations as potential adversaries who pose a threat to peace. These six are Iran, Iraq, Syria, Libya, Cuba -- and North Korea.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all six together spend a total of approximately \$15 Billion per year, just about the amount that the United States spends in three weeks. Nevertheless, these six week nations are the enemies against which our leaders say America must deploy forces to maintain the peace.

It is worth taking a few moments at this point to describe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Only by measuring the relative military power of North and South can it be determined if the continued presence of foreign troops is necessary in the ROK. I will briefly review the military balance as it exists today in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strength.

Far from being capable of projecting military power outside of its borders, North Korea

today more resembles an impoverished, rundown nation stumbling toward internal collapse. Its only apparent source of strength is a large army of approximately 1,000,000 men. Although it is almost double that of the ROK, it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such an army. U.S. intelligence agencies estimate North Korea's economy shrank between 15 and 30 percent from 1990 to 1993.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ies have severely undermined its military capabilities. None of this matches the picture of a smoothly functioning system able to supply the extraordinary logistic support needed th launch and sustain a blitzkrieg invasion of the South.

Nevertheless, the Pentagon has long portrayed the large North Korean military as a powerful, well-equipped force poised to sweep into South Korea at a moments notice. But North Korea is unlikely to start a war it would be certain to lose. Unlike 1950, its military today is not stronger than ROK forces. What the Pentagon always has pointed to as an invasion force may well be a defense force. From the perspective of small, insecure, and technologically outdated North Korea, a large military is not unreasonable for defense.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as overrated as the Iraqi army was as before the Iraq War. North Korea's air force is equipped with obsolete aircraft and its pilots don's fly much because of short fuel supplies. Its navy is a rag-tag fleet of small patrol boats. Its army is hampered by a lack of working trucks.

South Korea's mountains block most invasion routes. Elements of the ROK army gained relatively recent combat experience in Vietnam. Its population is twice as large as the North's and its economy is 12 times more productive. Its weaponry is generally more capable than that of the North. The ROK now builds many late-model weapons including tanks, aircraft, and ships. It is highly unlikely that North Korea could now conquer South Korea, whether or not U.S. forces were involved.

This is the assessment made by Admiral William Crowe in 1989 when he w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In his testimony to Congress he said :

"Our assessments do indicate that south Korea forces are capable of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any threat from the North that does not involve either the Soviet Union 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 went on to say that a drawdown of U.S. forces in south Korea would not change that balance. If there has been any change

since 1989, it favors the ROK -- not North Korea.

In part, because of the absence of a genuine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y to conquer South Korea,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its own nuclear weapons is now being used to sustain the image of a dangerous and threatening nation. But even this image is fading as the Framework Agreement of 13 June 1994 forms the basis for continuing negotiations and arrangements to defuse even the threat of a nuclear capability in North Korea.

In Malaysia last month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in overcoming DPRK reservations about plans for South Korea to build and install two light water reactors. As long as real progress is being made, it is certain that North Korea will not resume any overt efforts to reprocess the spent fuel from their Yongbyon reactor. Unless and until they take such an action, thereby sacrificing the important benefits conferred on them in the Framework Agreement, they will not and cannot achieve even a small degree of nuclear weapons capability.

At this moment, all suspicions concerning North Korea's nuclear status focus on the refueling of the Yongbyon reactor in 1989. The number of fuel rods removed is unknown but if the majority of the fuel rods were removed and reprocessed efficiently, North Korea might have recovered between 6 and 15 Kilograms of weapon grade plutonium. And if they have developed the requisite technology, they may have fabricated the postulated material into one or two nuclear explosive devices. In the worst case, these two devices could have been configured into one or two fission weapons. That is the situation today, all conjectural, that North Korea might -- may -- could -- have one or two relatively primitive nuclear weapons.

But possessing two weapons is far from having any useful capability to employ them for a valid military purpose. Consider the problems they face. First, the weapons have never been tested. No military commander can place any faith in untested weapons. Second, they must have solved all the problems of configuring the weapons into rugged, reliable packages that will withstand the rigors of whatever delivery system is chosen for them. Third, mating nuclear weapons to missiles or aircraft is difficult and technologically demanding even after the weapon's package is made small and light enough to fit in, or on, the delivery vehicle. Extensive, repeated test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at complex

safety features will function reliable when the plane or missile is launched.

I was a nuclear weapons delivery pilot in the U.S. Navy. I have studied, inspected, handled nuclear weapons. I have flown nuclear weapons on practice missions. I can assure you that every single procedure we followed was based on years of rigorous testing and was practiced countless times. Even then, some missions were evaluated as failures because of personnel, material or procedural errors by the highly trained special nuclear teams. No DPRK commander can possibly have confidence that untested weapons, untested procedures, relatively untrained personnel will all function perfectly and achieve the destruction of a chosen target.

All of the above reservations are compounded by the basic fact that no evidence exists that they have any aircraft or missile capable of carrying whatever weapon they may have been able to produce. It is not improbable that the assumed weapon is too heavy and bulky to be carried on anything but a truck or rail car. Remember, the first two U.S. fission bombs weighed 10,000 pounds and could be carried only in the largest bomber in the world.

There is a final reason to question the existence of any credibl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Of what military use is a single nuclear weapon -- or even 10 weapons -- when your adversary has 10,000 weapons more powerful, accurate and reliable than yours? You may threaten to use one or two or 10 but to actually use one would be suicidal. One explosion would guarantee the annihilation of your own nation.

From this brief analysis of the military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DPRK, I conclude two things.

1) The North poses no credible military threat to the South. They have neither the means nor any rational motive to attack the ROK.

2) The only real danger is that their many weaknesses make them feel threatened by the superiority of the South and its ally, the United States. If we act aggressively, threaten them with economic or political sanctions, set deadlines or issue ultimatums, we may push this weak, defensive, authoritarian government into a position which they believe puts their very survival at risk.

Then they could respond irrationally on the basis that they had nothing to lose by attacking because they were going to fall to their enemies anyway. But overly aggressive policies and actions we could create a tragedy which need never happen.

I will conclude by offering great hope that history finally is about to favor the Korean nation. After centuries of suffering from the presence and oppression of foreign occupiers, prospects are favorable for a unified, democratic Korean nation, free of foreign influence, a nation united to work for the well being of all of its citizens. At last, Korea for Koreans. I wish you well in a peaceful and prosperous 21 st Century.

<기조 발제 3>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¹⁾

Searching for the methods of reunification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과정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삼성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ee Sam-sung (Professor of Hanlim Univ.)

1. 통일한국의 궁극적 '사회상'의 문제

김영삼 정부는 출범 후 과거 한국정부가 제시해온 통일방안, 그 중에서도 특히 노태우 정부 하에서 다듬어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명시된 한반도 통일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의 정치사회경제체제에 관해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궁극적 미래상을 제시한 데에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구체적인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 표현 자체는 민주주의를 부각시킨 것이지, 자본주의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²⁾ 그것은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한다고 하고, 또 "지역적, 계급적 이익에 앞서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강조할 뿐,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서 사회주의를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만 남한사회 집권층

1) 이 글은 1995년 5월 27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주최 광복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기초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2)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 논문을 참조. 박영호, "세계화시대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전략," 세종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1995. 4. 26. 서울 힐튼호텔.

과 사회 주도층이 사실상의 자본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을 유일한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권력 주도층의 이해관계에 맞게 한국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특히 남한 쪽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의 과정 못지 않게 궁극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을 애써 강조한 것은 현재 남한사회의 연장으로서의 미래의 통일국가 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통일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틀을 통일논의의 출발점이고 그 종착점으로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방안이 통일된 한국의 국가형태를 연방제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 궁극적 사회상의 모습보다는 통합국가형태에 주안을 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어떻게 통일하느냐보다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 왜 통일하느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또 이 질문에 대해 남한 사회에서 광범한 합의를 동원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북한의 통일방안보다 더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 남한사회안팎에서 제시되어온 크게 보아 두 가지 흐름의 대안적 통일론들, 즉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론에 바탕한 통일국가의 미래상 논의에 대한 강력한 반론으로 작용하고 있다.³⁾

한편, 남한사회 내 진보적 지식인층이 제시해온 통일문제관련 제안들은 통일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북한의 접근방식과 남한정부 제안과의 창조적 절충 필요성을 제기해온 편이었다. 또 통일한국의 궁극적 미래상에 대해서는 남한사회의 궁극적 지배이념으로서의 민주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이상간의 불투명한 혼합을 제시하는데 머물러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한국의 진보운동이 1960년대의 민족주의, 1970년대의 반독재투쟁, 1980년대의 반체반자본주의의 성격을 다 끌어안고 전개되어온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특히 1980년의 광주의 비극은 남한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한 총체적 거부와 부정의 정서를 진보적 지식인층에 확산시켰다. 개인의 자유를 압살하는 군사독재의 전체주의적 성격에 대한 부정, 강대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야합하여 회해와 군축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반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 군사독재와 통일운동 억압에 활용된 국가보안법 바로 그 도구를 통해 노동계급의 착취에 바탕하여 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지적 거부, 이런 지적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되었다. 이런 인식에서는 남한사회는 서구의 민주적 자본주의에 나아갈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였을 뿐 아니라 서구의 민주적 자본주의 역시 한국과 같은 제3세계의 천민자본주의와의 야합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이중의 착취를 통해 존립하는, 그 바탕에 있어서 부패하고 부도덕한 체제로 보였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통일문제는 결국은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실현될 가망성이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서보다는 남한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 그리고 그와 연관되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

3) 북한의 통일문제 인식은 1993년 4월 7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김일성 前주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10대강령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분석으로는 전상인, "김정일 체제의 지배이념: '우리식 사회주의'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제2호, 1994, 특히 20-27면.

인 부도덕한 세계체제와의 궁극적인 역사적 투쟁의 문제였다. 이러한 인식은 냉전이라는 두개의 초강대국들 간의 긴장과 대립이 반영속성을 가진,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구조라는 역사적 인식과 결부됨으로써, 진보적 운동에 있어서 통일은 현실의 문제로서보다는 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서 나타날 이상적 대동사회의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진보적 인식에 있어서 북한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 즉 북한에서 인민의 정치적 주권이 현실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북한사회체제가 사회성원의 물질적 번영과 평등의 요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체제인가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운동에 대한 진보적 인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은 뒤로 미뤄지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그같은 문제들은 남한의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체제적 문제들과 그 도덕성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남한사회 자체가 자유와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로 변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남한사회 변혁에 의해 북한의 변화 역시 추동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통일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통일은 남한사회가 표상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권위주의적이고 반민족주의적인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정치질서--과 함께 북한사회가 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내포한 부정적인 것들을 변증법적으로 넘어선 새로운 질서, 변증법적 "지양"을 거친 추상적 미래를 의미했다. 통일은 남북한 양 사회의 현실에 기초한 현실적 비교나 통합에 기초한 것으로서보다는 상당히 먼 미래, 양쪽 사회의 질적인 변화에 바탕한 '역사적 비약'을 내포한 차원에서 사고된 것이었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방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은 통일의 문제를 추상적 역사의 차원에서 현실의 문제로 이끌어 내렸다. 탈냉전의 원인이 된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1990년대 들어 분명해진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1987년 6월의 항쟁과 독재의 몰락으로 인한 남한사회의 민주화경향과 함께 이와 대비된 북한사회주의의 폐쇄성과 권위주의질서의 지속은 보다 현실적 문제로 떠오른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하는 현실적 힘과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남한정부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급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남한의 진보적 통일운동이 통일된 한반도질서의 미래상의 개념을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라는 남북한의 현실사회의 구체적 문제들을 극복한 새로운 질서라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철학적 차원으로 유보해도 무방했던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통일은 이제 먼 미래의 일도, 그래서 미래에나 가능할 추상적인 새로운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족한 대로의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비교의 문제로 되었다. 그리고 그 현실적 비교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세계 체제적 변동과 함께 남한사회의 경제적 성공과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현실들에 의하여 결론지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남한사회내 진보적 통일운동의 과제는 통일한국의 사회체제로서 지금 당장 현실에 기초하되, 남한사회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냉전적 국제질서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한정부의 통일접근의 방식과 그 미래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은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첫째, 남한정부의 통일방안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서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철학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철학적 평가는 더 이상 자본주

의와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변증법적 지양으로서의 추상적인 사회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일 수 없었다. 그것은 민주적 자본주의의 성공과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라는 역사적 현실에 바탕한 현실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둘째, 진보적 통일운동은 한반도 통일의 문제에 대한 남한 권력층의 접근방안에 있어서 아직도 한국사회 내외에 존속하는 냉전주의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요소들을 반영하거나 그것들을 지탱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타내는 측면들을 비판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남한사회의 더 한 층의 민주화 지속과 평화적 방식에 의한 남북한간 대결과 이질성 극복에 바탕한 통일문제 접근의 논리를 개발해야 했다.

먼저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현실적 인식전환은 추상성과 혁명성 대신에 점진주의와 다원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노동의 대상, 노동과정, 그리고 노동의 결과물로부터의 소외"로 마르크스가 정의했던 인간소외의 극복이라는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이상의 차원과 현실사회주의 실패 이후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할 "집단지권과 개인간의 긴장"이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의 원초적 중요성"의 차원을 조화시키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반도의 미래상에 관한 진보적 비전에 그 위상을 재정립시키는 일이었다.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진보운동은 약소민족의 자주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독재, 즉 우익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추구하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보운동은 1980년 광주에서 극에 달한 남한 군사독재의 충격 속에서 남한의 사회체제와 그와 연결된 국제체제의 현실에 대한 총체적 부정과 혁명적 진보를 꿈꾸었다. '절대 악'의 '절대 지배'라는 현실은 처절한 지적 절망으로 이끌었고 이것은 기존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질서'(total absurdity)로 인식하게 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개인의 일상적 자유와 사사로운 행복추구는 무의미하고 심지어 도덕적이지 못한 것으로까지 여겨지는 경향을 낳았다. 개인의 일상적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구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혁명적 희생과 집체적인 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구조의 변혁이 없이는 개인의 존엄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대인식에서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동시에 그들의 이기적이며 사사로운 행복추구의 존중에 기초하고 있는 다원주의와 그 다원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점진주의는 설득력을 상실했던 것이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와 남한 사회에서 진행된 정치적 민주화는 한국의 진보운동에서 개인과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 "시민사회"와 "진보적 시민운동"의 개념들이 한국의 진보운동의 지평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은 이 문제들에 대한 상이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는 상관 없이 1970년대이래 특히 1980년대의 환경 속에서 익숙해져 있었던 구조적이며 추상적인 집체적 인식단위들과 개인의 차원을 다시 연결해 우리의 사유에서 양자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로서의 의미도 갖는 것이 사실이다.

4) 옛 동독의 저명한 역사가 위르겐 쿠진스키(Jurgen Kuczynski)는 동독이 무너지기 전인 1989년 10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쿠진스키는 필자도 참여한 '노동자신문'과의 한 인터뷰에서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를 인정했다. 필자에게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가 그 실패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질서의 권위주의적 성격에서 찾았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러한 자유의 억압이 노동자들의 창의성을 박탈했으며, 이점이야말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의 경제적 생산성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만든 가장 근본적 요인이었고, 그 결과 현실사회주의의 패배를 초래했다고 쿠진스키는 진단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진국의 수준으로 올라선 결과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질서 하에서도 한국인 개개인이 상당한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서구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제3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서구 노동계급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상당부분 노동계급들 자신의 투쟁과 노력의 소산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서구민주주의를 제국주의적 착취와 자본주의가 가져다준 선물로서만 간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서구 노동계급 성원들의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서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⁵⁾ 사회주의라는 현실적인 혁명적 대안이 사라진 이후 서구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한국지식인사회에 확산되어온 사정은 이를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1990년대의 변화된 국내의 상황은 한국의 진보적 통일운동의 지적 체계에서 개인과 다원주의의 의미,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체현하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식의 이적도 사회성원 대다수가 정치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즉 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질서'로서가 아니라 점진주의와 다원주의의 틀을 통해 새로운 질서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비전이 그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진보적 운동이 현재 겪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세계체제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유망한 중진국"이라는 몇 안되는 예외적 상황이 초래한 사치(奢侈)는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보적 운동의 현실적인 지적 기초는 다원주의와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배려된 무어가 일찍이 현대의 진보적 비전은 서구의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업적, 즉,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룩한 업적을 소화함으로써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재삼 음미하게 만드는 점이기도 하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진보적 통일운동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서 현재 강력한 현실적 모델인 민주적 자본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재평가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내포한 경제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적 자본주의는 그 경제적 내용에서는 개인의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그 핵심으로 한다. 현실사회주의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의 경제적 내용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노동의 해방이 아닌 국가의 전제를 낳았다고 한다면, 생산수단과 부의 국가소유를 떠나 개인의 사적 소유와 국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공동체적 소유를 적절히 접합한 형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⁷⁾ 국가사회주의가 국가의 계획경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국가의 전제의 근

5) 프레데릭 왓킨스는 일찍이 그의 대표적인 저작 『서구의 정치전통』에서 서구 민주주의의 성장을 부르주아만의 업적으로 보는 것에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투쟁이 서구 민주주의에서 부르주아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다원주의적인 민주질서를 성립시키고 유지하는데 결정적 요소였음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Frederick Watkins, *The Political Tradition of the West*.

6) Barrington Moore, Jr. *Reflections on the Causes of Human Misery and upon Certain Proposals to Eliminate Them* (Boston: Beacon Press, 1970, 1972), p.192.

7) 社民主義 국가들은 사적 소유도 국가적 소유도 아닌 제3의 소유형태로서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그다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시도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광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60년: 가능성과 한계." 『계간 사상』, 1994년 봄호, 66-67면.

거였다면, 국가의 경제개입과 시장메커니즘 양자간의 일정한 결합과 균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역시 시장의 專制로 귀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정의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을 가로막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적 평가는 현실의 서구자본주의가 현실 사회주의 하에서보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장하는 다당제를 포함한 다원적 정치제도들의 의미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곧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의 하나로 정의하는 다원주의적 정치이념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 그것만으로 환원하는 옹호론적 다원주의론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⁸⁾

그러나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현재 한국의 집권층이 논의하는 민주주의 논의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특히 유럽에 보편화된 민주주의의 정치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단결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쟁취하려는 정치적 투쟁에 의하여, 또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다원주의의 외양은 갖췄으나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의 단결권만이 인정되는 현재의 남한의 정치질서는 민주적 자본주의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한국민주주의의 초보성을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는 앞에서 지적한 노동계층의 정치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하에서 가능해질 복지사회로의 강한 지향성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의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초래하는 불평등과 생산수단의 소유와 비소유를 매개로 한 억압적 메커니즘을 의미 있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에 바탕한 노동자들의 정치 사회적 정책결정참여의 확대가 요청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조건부적인 긍정적 재평가는 바로 위와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통일한국을 현실적인 구체적 현재의 문제로서 사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 단계의 현실적 미래상이다. 진보적 역사관은 그 이후의 변증법적 역사적 진보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며, 진보적 학문이라는 것은 사민주의적인 민주적 자본주의의 틀을 넘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더욱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부단히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단, 그것은 우리가 일단 사민주의가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실현한 이후 그 업적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비교적 먼 미래의 사회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현실적 미래상은 바로 그같은 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필요성을 전제하는 것임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적인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조건부적 재평가는 또한 그러한 개혁적 변화들이 한국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의 국제적 위상이나 한국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적 한계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제약 당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그러한 민주적 자본주의가 서구라

8) 이삼성,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3), 제3부의 제1장이 다루고 있는 미국사회에 관한 다원주의론과 그 문제점 부분을 참조.

는 특정한 사회들 속에서만이 장기지속이 가능한 것이고 세계체제에서 그 정치 군사적 지위나 경제적 위상의 한계로 인해 한국이라는 사회와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확산될 때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진보적 논의에서 총체적 변혁의 문제가 또다시 사상적 논의의 강력한 축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진보적 통일운동이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관련해 위의 점들과 관련해 현실적 재평가로 향해왔다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집산주의에 대한 회의와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부분적 수용의 필요성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이후인 1993년 발표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다원주의와 자본주의의 요소들에 대해 과거와 다른 포용성까지도 비치고 있다. 10대 강령중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한다고 한 제6항이 다원주의적 인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한 제7항은⁹⁾ 민족대단결을 대원칙으로 앞세우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요소들과의 융화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원주의와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해 북한의 10대 강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포용성은 물론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것이며,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대폭적인 인정과 다당제라는 구체적인 정치적 다원주의의 문제들에 북한이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강한 거부감과 모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한반도 내외의 현실의 변화를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인식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자본주의에 대한 이같은 재평가의 필요성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덧붙여 유의할 점이 있다.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관련한 진보적 인식의 변화의 핵심의 하나로 필자는 앞에서 반독재투쟁의 심화과정에서 부차화되었던 "개인의 자유"라는 문제의 철학적 복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학계 일부에서는 오히려 한국 통일운동의 지적 급진화를 강요했던 남한사회의 역대 독재정권들에 대해 보수언론의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전면적인 정당화 공세의 여파 속에서 이들 독재정권들에 대해 상당부분 역사적 불가피성의 논지아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을 우려한다.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패 이후 한반도 통일운동의 바람직한 지적 성찰의 방향은 권력과 인간, 집단과 개인의 긴장과 갈등의 관계에서 개인의 차원의 중요성, 결국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해야 하며, 그것들을 억압했던 우익 권위주의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정치적 복원을 추구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한반도 '통일과정' 접근방안의 개념적 문제

(1) 통일방안 논의의 의미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진보적 인식에서 중요한 두 번째 지적 과제는 앞서 지적한대로, 한국의 집권세력과 사회수도층중 냉전시대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체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한국정부의

9) 전상인, 앞의 글, 22면.

통일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의 작업이다. 한반도 통일과정과 관련한 한국정부 및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논의가 그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관성적인 냉전시대적 사고의 틀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점들을 적절히 지적하고 대안적인 접근의 틀을 제시하는 일이다.

통일과정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치공동체 형성의 단계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치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는 전제조건들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논의하여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남한당국과 북한당국의 시각차이의 본질을 분석하여 내고 그 긍정적인 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 안팎에서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측이 제시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야권의 입장에서 제기한 대표적 통일방안논의로서의 김대중 아태평화재단이사장의 3단계 통일방안론이다.¹⁰⁾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 통일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연합 → 연방제 → 통일국가라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절충한 방안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 연방제 → 통일국가라는 4단계적 과정이 제시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¹¹⁾ 김대중 이사장의 3단계통일방안도 그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4단계적 관점에서 통일과정을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김대중의 통일방안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일방안에 하나의 명시적 단계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실질적인 통일방안 자체는 남북기본합의서 각 항의 화해협력, 불가침조치, 교류·협력 등의 즉각적인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들 통일방안들은 단순히 통일의 '경로'를 설정한 것일 뿐 아니라 통일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시각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앞서 지적한 통일과정에 관한 논의들의 두 가지 차원--정치공동체형성의 단계에 관한 시각과 함께 그 정치공동체 형성의 전제조건들에 관한 시각--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다같이 실질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전제로 정치공동체형성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 두 방안은 북한과의 정치협상의 필요성에 관해 의미 있는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을 유의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방안은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정치공동체 형성 이전에 그 전제로서 화해·협력 단계를 부각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다. 반면에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정치공동체형성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³⁾

10) 다음 논문은 통일방안에 관한 이들 논의들을 잘 요약해 분석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모색," 세종연구소 주최 세연학술포럼, "한국의 국가전략 대토론회," 1995년 4월 26일, 서울 힐튼호텔.

11) 이종석, 위의 논문. 필자 역시 1994년에 출간한 저서에서는 "화해·협력단계로부터 국가연합→ 연방국가 → 1민족 1국가 형태로 정치공동체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함으로써 동일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의교』 (서울: 한길사, 1994), 200면.

12) 김대중 이사장의 3단계통일방안논의는 남북합의서의 채택과 북미일괄타결이 화해협력 그 자체의 실천으로 보고 현재 단계에서 남북연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최성, "남북연합의 통일전략," 제2회 세연학술포럼, 1995년 4월 26일, 서울 힐튼호텔).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전제로 3단계 통일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할 때, 그 방안은 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13) 최성, 앞의 논문, 3면.